

기타 연구보고 M73 / 2005. 12.

2005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활동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이 연차보고서는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사업의 활동보고서이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CAAS/IAE) 및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더불어 농업, 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 결성된 포럼이다. FANEA는 2003년 10월 서울 제1회 국제심포지엄과 2004년 10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제3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FANEA 국제심포지엄은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이 매년 한 차례씩 주최하여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2005년 제3회 심포지엄을 끝으로 ‘제1라운드’가 완료되었다. 지난 3년간 세 차례 국제심포지엄에서 모두 35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포럼은 KREI, IAE/CAAS, PRIMAFF의 3개 기관 협력으로 동북아 지역의 농업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FANEA 사업을 담당하던 동북아농정포럼TFT를 대신하여 새로 발족한 동북아농업팀에서 이 사업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FANEA는 한·중·일 3국의 농업 연구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내 농업정책 조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유하고 참여 기관 간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포럼 사업에 외부 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외 개방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FANEA 포럼 운영 사업과 이 연차보고서 집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북아농업 팀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1. 사업목적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IAE/CAAS) 및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더불어 농업, 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에 창립된 포럼이다.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영사업은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된 활동과 한·중·일 3국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연구, 초청세미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포함한다.

2. 사업 내용 및 결과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국제심포지엄의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공동 연구 및 기타 협력사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FANEA 공동사업 추진협의회(정기 기관장회의)」를 2005년 4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3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이 자리에서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시, 장소 및 주제를 확정하고, 3개 기관 간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인력 교류에 합의하였다.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일본 PRIMAFF 주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과 같은 소주제로 총 15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FANEA의 공동 연구 사업으로 KREI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이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한 역내 농업협력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과 정책분석 D/B 구축 및 모델링 연구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별도의 3국 연구진 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청세미나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과 “중국의 농산물 국제교역과 경쟁력”을 주제로 두 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쌀 시장 개방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가공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의 현상과 문제,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ABSTRACT

2005 FANEA Annual Report

The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east Asia(FANEA) was establish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and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PRIMAFF) in Oct 2003. This forum was aimed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related aspects across 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a joint commitment to foster mutually benefi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activities for FANEA in 2005 are mainly consisted of international symposium, joint studies, invitation seminars, management of homepage,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Director General/President Meeting of FANEA was held on April 29, 2005 to discuss the detailed plan for FANEA 3rd International Symposium, joint research projects and other cooperative programs. In this meeting, theme, time and venue of the 3rd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and other matters such as joint research and exchange of researchers were discussed and determined.

The 3rd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t Asia" was held from Oct 25 through 26 in Tokyo, Japan. In this symposium, hosted by PRIMAFF, 15 papers dealing with three subordinate them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EA',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an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were presented and debated by participants from three countries.

Since 2003,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has been annually held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urn. Until this year, 35 papers were presented in the Symposium. The Forum have been performed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on regional agricultural issues by the cooperation among IAE/CAAS, PRIMAFF, and KREI.

As a joint research project, FANEA performed a joint study on "Plan for boosting agricultural cooperation after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ith Research Center for Rural Economics, Ministry of Agricultural

P.R. China. For cooperative research on “D/B and Modeling of Agricultural Trade and Policy Analysis in Northeast Asian Agriculture” the researchers involved from three institutes discussed problems and solutions through experts meeting held in Oct, Japan.

Besides, FANEA have hosted two invitation seminars with titles “China's Economic Rise and Impacts on Korean Peninsula” and “China's agricultural trade and competitiveness.” It also he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under the theme of ‘Now and future of Rice industry in North east Asia’. In this symposium, attendees discussed the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filed of production, marketing and processing of rice in the course of opening of rice market.

차 례

제1장 운영 현황

1. 설립 배경 및 목적	1
2. 연혁	2
3. 운영 조직	3
4. 2005년도 동북아농정포럼 주요 사업계획	3
5. 추진 일정	7

제2장 당해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

1. FANEA 공동사업 추진 협의회(정기 기관장회의)	8
2.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10
3. 공동연구	28
4. 초청세미나	32
5. FANEA 홈페이지(www.fanea.org) 운영	37
6. 기타 대외 학술 협력 활동	39

부록 1.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관련 사진	45
부록 2.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48
부록 3. 제3회 FANEA 기관장 회의 합의문: Draft Agreement at DG/President Meeting (05/10/25)	94
부록 4. 초청세미나(1, 2회) 사진자료 및 발표자료	96

제 1 장

운영 현황

1. 설립 배경 및 목적

- WTO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가 규범화하면서 보편적인 국제 규율이 강조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 통합에 기초하여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최근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도 이 지역이 가진 특수성에 기초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고유한 논리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은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벼농사에 특화된 ‘아시아 답작 농업구조’라는 유사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진전되면 동북아 지역 내에서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이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협조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길

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개방화 논의 과정에서 지역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과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농업 및 농촌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중·일 3국의 농정연구에 있어서 협력은 물론 장차 동북아지역의 농업, 농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한·중·일 3국의 농업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WTO/DDA 농업협상 등에서 공조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분업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농업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 및 축적이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주축으로 농업, 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 등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을 창립하였음. 향후 동북아지역 농업 및 농촌분야 연구협력에 관심을 가진 역내 국가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네트워크로 육성할 계획임.

2. 연혁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홈페이지(www.fanea.org) 구축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립기념행사(MOU체결) 및 제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4. 5 동북아농정포럼TFT 설치
- 2004. 10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웨이하이시)
- 2005. 10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도쿄)
- 2005. 10 동북아농정포럼TFT이 동북아농업팀으로 통합

3. 운영 조직

-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동북아농정포럼TFT이 동북아농업팀(팀장 어명근)으로 통합·재편되었음(2005. 10).

- 운영진 구성: 어명근 팀장 외 5인

직 위	성 명	담당 분야
연구위원	어명근(팀장)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영사업 총괄
연구위원	허 장	기관 간 교신 및 공동연구
연구위원	정정길	공동 연구 및 대외연구협력활동
연구위원	김태곤	대외연구협력활동
전문연구원	한근수	FANEA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초청연구원	이현주	기관 간 연락 및 실무 담당

4. 2005년도 동북아농정포럼 주요 사업계획

4.1.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참가 및 지원

- 일시: 10. 25 ~ 26(심포지엄), 10. 27(현장견학)
- 장소: Toranomom Pastoral(일본, 도쿄)

- 주제: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t Asia)
 - 소주제 1: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EA)
 - 소주제 2: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 소주제 3: 동북아 농업생산과 농촌 환경의 다원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4.2. FANEA 공동사업 추진협의회(정기 기관장 회의) 주최

- 일시: 2005. 4. 29(목) 10:00~11: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경연당)
- 참석인원: 총 6명
 - 한국: 이정환 전임 원장, 어명근 동북아농업팀장
 - 중국: Dr. Qian Keming(소장), Dr. Li Suoping
 - 일본: Dr. Nishio Takeshi(소장), Dr. Watanabe Yasuo
- 의제별 회의내용:
 -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의 세부계획 협의
 - 공동 연구 프로그램 모색
 - 연구인력 교류 방안 협의

4.3. 공동 연구 추진

□ 한·중 공동 연구: 한·중 FTA가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가칭)

- 공동 연구기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 주요 연구내용:
 -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 개황과 FTA 체결의 필요성

- 최근 중국 농업의 동향
- GTAP 모형 소개 및 지역·부문별 간단 일반균형모형 수립
- 두 가지 정책 시뮬레이션:
 - 완전한 한·중 FTA 체결 방안
 - 농산물을 제외한 한·중 FTA 체결 방안
- 연구기간: 2005. 4. ~ 10(6개월)
- 위탁연구비(예산): US\$ 15,000

□ FANEA 공동 연구: 동북아 무역 모형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한·중·일 전문가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05년 6월(2박 3일), 일본(PRIMAFF)
 - 목적: 연구 세부내용 협의

□ AGLINK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05년 9월 이후 중국(IAE/CAAS) 개최예정
- 내용: 일본 고바야시 박사 주제 발표
- 기타: 체재비 중국 부담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동북아 농산물 교역 모형”(가칭)

- 한·중·일 공동으로 세계은행이나 ADB에 기금 신청
- 농촌문제(Rural Problem)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 보완한 제안서를 제4차 기관장 회의(2005. 10. 25)에 제출, 협의

4.4. FANEA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 콘텐츠 내용 보완 및 강화
- ‘Publication’에 보고서 및 기타 발간물 업데이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 등 관련 사이트 연계
- FANEA 홈페이지 공동관리자(Joint Webmaster)에 의한 홈페이지 활성화

* 공동관리자:

- 한근수 전문연구원(KREI)
- Mr. Hayakawa Tadashi(PRIMAFF)
- Ms. Wang(IAE/CAAS)

4.5. 초청세미나, 토론회 및 기타 학술대회 주최**□ 초청세미나**

○ 제1회 초청세미나

- 일시: 2005. 1. 19(수) 오후 4시
- 장소: 본관 중회의실
- 주제: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 발표자: 한광수 학장(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 제2회 초청세미나

- 일시: 2005. 7. 7(목) 오후 3시
- 장소: 본관 중회의실
- 주제: 중국의 농산물 무역과 대외경쟁력
- 발표자: 웡밍 박사(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 동북아농업구조연구회 국제심포지엄

○ 일시: 2005. 9. 21~25(4박 5일)

○ 장소: 본관 대회의실

○ 참가기관:

- 한국 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최), 대학, 농정연구센터, 농협조사연구소 등
- 중국 측: 길림농업대학, 국무원, 중국 농업대학 등
- 일본측: 도야마대학, 동경대학, 이바라기대학, 홋카이도대학 등

* 심포지엄 개최와 현장견학 비용은 주최기관이 부담하고, 참가비는 개인 부담.

제 2 장

당해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

1. FANEA 공동사업 추진 협의회(정기 기관장회의)

1.1. 개최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IAE/CAAS),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가 공동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특히, 2005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의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공동 연구 및 기타 협력사항에 관해 논의

1.2. 개요

- 일시: 2005. 4. 29(금) 9:30~11: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연당
- 참석자:
 - PRIMAFF: 니시오 타케시 소장, 와타나베 야스오 국제정책부장
 - IAE/CAAS: 첸커밍 소장, 리수오핑 기획실장
 - KREI: 이정환 전임 원장, 어명근 연구위원

○ 주요 협의 내용

1)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시, 장소 및 주제 등 확정

가. 일시: 2005. 10. 26~28(3일간)

나. 장소: 일본 도쿄 Toranomom Pastoral

다. 주제: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t Asia)

라. 심포지엄 일정

일시	행사	내용
10월 26일 오전	FANEA 기관장 회의	
10월 26일 13:30	개회식	
10월 26일 오후	제1세션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orth East Asia(NEA)
10월 27일 오전	제2세션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10월 27일 오전	제3세션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마. 기타 사항

- 발표 자료(PPT)와 원고는 영문으로 작성
- 발표언어는 영어 또는 일어 사용가능(동시통역)
-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 4~6명, 지정토론자 3명 예정
- 한국과 중국 10명씩 항공료와 체재비 지급계획(PRIMAFF)
- 지정토론자를 소주제별로 1명씩 모두 3명 선정

2)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가. 동북아무역모형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한중일 전문가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내용 협의(2005년 6월, 일본개최)

나. Aglink 워크숍 개최 합의

- 2005년 9월 이후 중국(IAE/CAAS) 개최
- 일본 고바야시 박사 주제발표
- 체재비 중국 측 부담

3) 기타(한·중·일 공동 연구 관련 중국 제안)

- 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동북아 농산물 교역 모형(가칭)” 과제로 한중일 공동으로 세계은행이나 ADB에 기금 신청
- 나. 농촌문제(Rural Problem)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 보완한 제안서를 제4차 기관장회의(2005.10. 26)에 제출, 합의

4) 연구인력 교류

- 2004년 PRIMAFF 초청세미나(한국 2명, 중국 1명) 호평. 2005년에도 개최 예정(세미나 1회 발표조건, 1주일간 체재비와 항공료 제공)

2.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2.1. 개최 목적

- 동북아농정 연구협력을 위한 □□동북아농정연구포럼□□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농업 및 농촌경제 분야에 있어서 공조, 공생을 위한 협력 가능분야와 전략을 상호 모색
- 특히, FANEA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중·일 농업분야 전문가간 지식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농업 및 농촌 분야 협력 강화

2.2. 개요

- 일시: 2005. 10. 25~26(심포지엄), 10. 27(현장견학)
- 장소: Toranomom Pastoral(일본, 도쿄)
- 주제: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Glob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North East Asia)
 - 소주제 1: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blems in NEA)
 - 소주제 2: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Rural Development and Disparity Problems in NEA)
 - 소주제 3: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Environment in NEA)
- KREI 참석자: 총 7명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최정섭		원 장	
어명근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	동북아농업팀장, 심포지엄 제3세션 좌장
김정호	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심포지엄 제1세션 발표자
박시현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심포지엄 제2세션 발표자
김창길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심포지엄 제3세션 발표자
김태곤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심포지엄 제2세션 토론자
이용선	농업관측정보센터	연구위원	심포지엄 제1세션 토론자

○ 심포지엄 전체 일정

날 짜	시 간	행 사	비 고
10.24(월)	11:55~13:55	출국	JL8832(김포 - 하네다)
	16:00~17:00	호텔 체크인	Toranomon Pastoral
	18:30~20:30	환영만찬	PRIMAFF 주최
10.25(화)	10:00~11:00	기관장 회의	PRIMAFF Kasumigaseki 사무실
	12:30~13:00	등록	Toranomon Pastoral Room "Mimosa"
	13:00~13:30	개회식(환영사)	IWANAGA Mineichi(농림수산성장관) NISHIO Takeshi(PRIMAFF소장)
	16:35~18:55	원장 귀국	NH1293(하네다-김포)
	13:30~14:00	기조연설	Inoguch Kuniko(소피아대 법대 교수)
	14:00~18:00	제1세션	좌장: Shimamoto Tomio (전 PRIMAFF 소장)
	18:30~20:30	환영 칵테일	Room "Laurel"
10.26(수)	09:00~12:30 (10:00~12:00)	제2세션 (무역모형전문 가 회의)	좌장: Fu Qin(IAE/CAAS 소장) (Kasumigaseki 사무실)
	13:30~17:30	제3세션	좌장: 어명근(동북아농업팀장)
	17:30~18:00	폐회식	
10.27(목)	09:30~18:00	현장견학	도쿄 근교 치바현 견학
	18:20~20:50	김정호 박사, 박시현 박사 귀국	JL959(나리타 - 인천)
10.28(금)	09:30~12:00	현장견학	
	14:25~16:55	귀국	JL953(나리타 - 인천)

○ 심포지엄 상세일정

10. 25(화)

12:30-13:00 등록(Toranomon Pastoral의 Room “Mimosa”)

13:00-13:30 환영사

- 니시오 다케시(PRIMAFF 소장)

13:30-14:00 기조연설

“동북아 지역협력과 농업의 역할” (이노구치 구니코 의원, 소피아 대학 법학부 교수)

14:00-18:00 제1 세션: 동북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 좌장: 시마모토 토미오(PRIMAFF 전임 소장)

▶ 발표:

-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 문제” (하시주미 노보루, PRIMAFF)
- “도농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에가와 아키라, PRIMAFF)
-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 KREI 선임 연구위원)

▶ 토론: 왕 쟁(중국투자협회 농업농촌위원회 부의장)

▶ 발표:

-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 정책” (리 산데, IAE/CAAS)
- “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류 샤오혜, IAE/CAAS)

▶ 토론: 이용선(KREI 연구위원)

10. 26(수)

09:00-12:30 제2 세션: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문제

- ▶ 좌장: 친 푸(IAE/CAAS 소장)
- ▶ 발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유경희, PRIMAFF)
 -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아이카와 요시히코, PRIMAFF)
- ▶ 토론: 김태곤(KREI 연구위원)

- ▶ 발표:
 - “한국에서의 도농 간 발전 격차 실태” (박시현, KREI 연구위원)
 - “중국의 농촌 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왕 상구이, IAE/CAAS)
 - “농촌의 불균형” (싱 리, IAE/CAAS)
- ▶ 토론: 미즈노 마사미(니혼대학 생물자원과학부 교수)

13:30·17:30 제3 세션: 동북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 ▶ 좌장: 어명근(KREI 동북아농업팀장)
- ▶ 발표:
 - “농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다카하시 요시푸미, PRIMAFF)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과제” (고다 모토유키, PRIMAFF)
- ▶ 토론: 리 산데(IAE/CAAS, 교수)

- ▶ 발표: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 KREI 연구위원)
 - “순환 경제 메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 관리” (주 리지, IAE/CAAS)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후 지관, IAE/CAAS)

▶ 토론: 고야마 오사무(일본농업과학 국제연구센터 개발연구부장)

17:30-18:00 폐회식

○ 주제 발표 논문 요지(KREI측)

1)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 KREI 선임연구위원)

-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업농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음. 이 기간의 농업구조 정책과 경쟁력 제고대책은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비용 절감, 즉 규모 경제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의 재정투입자는 주로 생산기반 정비와 경영규모 확대에 사용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농업은 빠르게 양극화의 길로 들어섰음. 최근의 농업구조 변화의 특징을 보면, 농가는 대다수가 영세농 층으로 퇴적하는 반면에 생산은 소수의 대농 층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대농이 활성화된 평야지역 농업은 성장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중산간 지역의 농업은 쇠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교역 조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농가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앞으로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것이며, 따라서 영세농과 중산간 지역은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농업의 양극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국들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음. 특히 유럽 각국은 1970년대까지 산업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영세농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구상하게 되었음. 오늘날 직접지불제도는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농업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의 양극화는 산업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농촌사회의 갈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농정의 당면 과제이며,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촌사회의 계층 간·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조율이 필요한 때임.
- 바람직한 농업구조 조정이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개방 시대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생산조정이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 농업을 위축시키므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 기능을 통하여 구현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경쟁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에서 유연하게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정부는 시장기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과 지역에 대하여 직접지불 등의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해야 할 것임.

2) “한국에서의 도시 농촌 간 발전 격차 실태”(박시현 KREI 연구위원)

-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분포를 볼 때 경제활동기회의 도시 농촌 간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 1995년 전국 제조업대비 도시지역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 수 등 주요 생산 관련 지표면에서 80% 내외였던 것이 2002년에는 약 88%로 약 8%포인트 정도 높아졌음. 또한 1995년 서비스업의 농촌분포는 사업체 수 14%, 종사자 수 12%에 달하던 것이 2002년에는 11%, 9%대로 감소하였음.

- 한편 소득의 도시 농촌 격차를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변화 추세로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1963~1965)과 1974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8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을 상회한 이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1995년 이후 IMF 위기를 거치면서 두 그룹 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 수준을, 2002년에는 73%에 불과한 실정임.
-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농촌 투자에 힘입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 여건의 격차는 매우 완화되었음.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우월한 분야도 있음.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편임. 이것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인 매력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농촌이 과소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거 서비스, 상·하수도 보급 정도, 의료 및 복지여건, 문화 및 체육시설 등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존재함.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인구적인 특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농촌 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64.2%에서 2000년의 15.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 간도에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과거 1일 생활권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면 지역의 정주 기반을 와해하고 있음. 1960년대 인구 1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던 면 지역은 2000년 평균 약 4,600명으로 감소하였음. 2천 명도 거주하지 못하는 면이 170개나 이르고 있음. 농촌의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200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도시의 고령인구비율은 6.3%임에 비하여 농촌의 경우는 16.7%로 도시보다 2.6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음.
- 이처럼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가장 중요한 소득문제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증대되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에 기초한 농촌의 소득 감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김창길 KREI 연구위원)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 공급의 본원적 기능 외에도 농업생산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농촌 경관 유지, 토양보전 및 수질함양과 같은 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전통문화 유지 등 비시장재화를 산출하는 기능을 말함. 농업부문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에 관해서는 그동안 OECD, FA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음.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접근에 의해 결합생산은 다원적 기능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와, 외부경제와 공공재의 특성은 다원적 기능의 편익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 여기서는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과 관련 우선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이론 검토를 위해 결합 생산성 측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원칙으로 수혜자부담원칙, 소비자부담원칙, 공급자혜택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

○ 각 세션별 토의 내용 종합

1) 「동북아 농촌개발과 불균형 문제」 세션

- 한국의 농촌문제의 근본은 빠른 속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부문간의 내부적 조정문제를 크게 다루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됨. 1970년대 농촌개발과 관련 새마을 운동은 경제발전의 사회적 조정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의 전후 부흥기 농촌생활환경개선 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음이 지적됨. 최근의 농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은 과거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회적 내부조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음.

- 중국의 농업 및 농촌문제, 농촌의 빈곤문제 등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로 이해 될 수 있음. 다만 중국이 타 개도국과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한 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임이 지적됨.
- 중국의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 문제는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과의 과실이 농촌에 골고루 전파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 될 수 있음. 최근 중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농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시각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최근 일본의 농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부족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지적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정난 문제와 연계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됨.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세션

가. 지정토론자 고야마 오사무 부장(일본농업과학 국제연구센터 개발연구부)

-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달리 평가될 수 있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관련해서 결합생산,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핵심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이미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이므로 전적으로 공감함.
- 최근 다원적 기능의 논의와 관련하여 과연 국제적인 규범 속에서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 또한 OECD에서 다원적 기능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관계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질의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국제기구에서 점차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한국과 유럽 등 관련국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농업의 환경 부하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효과(net effect)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나. 청증석에서의 질의 내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생산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양극화 되는 경우 실제로 다원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이 지적됨. 농업활동의 환경적인 측면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비교 검토와 관련 일본 북해도의 사례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학적인 접근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법적인 연구도 필요함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함. 중국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관성 등 지표의 선정 기준과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index) 개발도 필요함이 제시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주제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모두가 공통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제협상에서의 공동보조,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하면 세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해당국 정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보호논리는 물론 정부의 농업지원을 위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국가마다 다원적 기능 가운데 요소별 중요도는 차이가 있으나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당성 제시를 위해서는 농업활동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비교 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함이 제시됨.
- 금년도 일본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논의된 농가소득 격차문제, 다원적 기능과 환경 문제 등은 모두 중요한 이슈로 폭넓은 주제이나 수렴이 가능한 주제라고 평가됨. 각 부문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함.
- 한·중·일 3국의 미래 농업은 밝은 면과 국제화 물결의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책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연구자간 네트워킹을 구축하면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FANEA 포럼을 좀 더 확대하여 미국 등 관심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연구포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2.3. 기관장 회의

- 일시: 10월 25일 오전 10시~11시
- 장소: PRIMAFF Kasumigaseki 사무실
- 참석자: 최정섭 KREI원장, 친 푸 IAE/CAAS 소장, 니시오 다케시 PRIMAFF소장, 어명근 KREI동북아농업팀장, 와타나베 야수오 PRIMAFF 국제정책부장, 리 산데 IAE/CAAS 교수
- 주요내용
 - 1) 공동 연구 관련사항
- 한·중·일 3개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식품 안전성 또는 친환경 농업 등 공통 주제에 대하여 3개 연구기관 전문가들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확보할 필요성 있음.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연구자 이름과 전문 분야,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목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함.
- IAE/CAAS는 현재 추진 중인 무역모형 과제인 동북아무역분석프로그램(NEATAP) 개편 작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공동 연구 주제로 “한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개혁”을 제안하였음.

2) 연구인력 교류

- 일본측은 한국이나 중국이 PRIMAFF의 OECD AGLINK 모형 전문가인 우에바야시(Uebayashi Atsuyuki) 유럽연구실장을 초청할 경우 특강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3) 차기 심포지엄 관련 사항

- 한국은 현재와 같은 10월 말 개최는 계절적으로 너무 바빠 적절하지 않으므로 7월이나 9월에 개최하자고 제안하여 일단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음.
- 차기 심포지엄 주제는 미정이나 식품 안전성(Food Safety)과 무역 모형(AGLINK 포함), 세계화(Globalization) 등의 주제가 제시되었음.
- 한국은 제4회 심포지엄부터는 각국의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고 향후 동남아나 미국의 연구기관도 참여시켜 FANEA를 확장시키자고 제안. FANEA 회원 기관을 확대하는 것인가라는 중국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방청객(observer) 또는 손님(quest) 자격으로 초청하자는 의미라고 답변. 일본은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IRCAS)를 추천.

2.4. 무역모형 전문가 회의

- 일시: 10월 26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PRIMAFF Kasumigaseki사무소
- 참석자: 어명근 KREI동북아농업팀장, 이용선 KREI농업정보화팀장, 우에바야시 PRIMAFF동아시아실장, 류 샤오혜 IAE/CAAS교수
- 주요 내용
 - 중국 측은 한·중·일 3국간 농산물 무역 모형을 구축하려던 당초 계획 대신 기존 GTAP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하였다고 설명.
 - 한·일 양측은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생산구조를 투입체계에 할당하는 작업이라 강조하고, 역내 농산물 무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GTAP의 지역과 부문을 구분(Disaggregate) 및 재분배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
 - 개편된 무역 모형은 4지역(한·중·일, 나머지 세계), 32 품목(농산물 18개)으로 구성. 기타 잡곡으로 분류된 옥수수과 과일 및 채소류의 대체탄력성을 구분하는 문제, 한·중·일 3국의 투입산출표(I/O Table) 연도(2001년)와 GTAP 버전(Version 6)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일본측은 이러한 작업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중국이 답변. 중국은 구축된 DB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하겠다고 제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류 교수가 퍼듀대학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참고(www.purdue.ac.)

2.5. 현장 견학

10. 27(목) 09:30-18:00

- 치바현 샷포로 맥주공장
- 치바현 야치요 미찌노에끼 도농교류센터
- 인반누마 토지개량사업 현장

10. 28(금) 09:30-12:00

- 치바현 마루야사 농협

<현장 방문 결과: 인반누마 토지개량사업지구 현지 방문>

□ 지역의 개황

- 치바현 야치오 시의 북동부에 위치. 1948년부터 1952년 사이에 1차 경지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구획이 5a로 작고 농로도 좁으며, 또한 용수로가 흩으로 된 것이 많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 대상 지구 면적은 24.8ha 해당 농가 수는 86호
- 총사업비는 4억8천만 엔으로 1ha당 1,935만 엔 소요 예정
 - 파이프라인 용수로, 암거배수, 양수기 1기, 농업공원 등을 포함
- 참고로 우리나라 경지정리사업은 4,000만원/1ha. 종합정비사업(용수, 배수, 대구획경지정리)의 경우 7,000만원/1ha에 비추어 보면 사업비가 매우 높은 편임

□ 경지 정리 사업에 농업공원 등 도시 농촌교류시설 포함

- 이 사업지구의 특색은 경지 정리사업을 통해서 농업공원 및 관광용 농지(관광농원, 주말농원, 체험농원 부지) 등의 토지를 창출하는 것임.

- 설계단계에서부터 농업공원부지와 관광용도의 농지를 구획
- 농업의 3차산업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 개량사업과 도시농촌교류사업의 접목이라 할 수 있음.
- 농업공원과 관광농업용부지는 야치오 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사업으로 시설을 정비
- 관광농업은 임대농원, 체험농원, 과수 따기, 고구마 캐기 등 사업으로 이 사업지구의 농업 담당 농사조합법인 시마다 관할(복합영농 차원)
- 농사조합법인 시마다는 이 사업을 위해 2005년 3월에 설립된 것으로서 12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 이 중 오페레타는 3명임.
- 오페레타는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사를 담당할 사람임. 최근 일본의 토지개량사업은 사업의 조건으로서 법인화 및 오페레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오페레타 3명이 지구내의 농업과 관광농업을 경영할 예정

□ 토지개량사업을 통해 농지의 유동화,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전

- 토지개량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농지의 집적과 법인 만들기를 유도
 - 이 사업지구 내의 토지 24.6ha중 9.5a인 38%가 농사조합법인에게 집적될 예정
 - 집적 예정 토지는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농지의 파편화를 방지
- 인반누마 토지개량구에 속한 다른 사업지구의 경우 128명이 소유하고 있는 22.8ha의 농지가 한 사람의 오페레타에 의해 경작되고 있음.
 - 1구획이 7.5ha로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구획을 자랑

□ 일본 사례 심층 검토 필요

- 농지의 유통화 및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한일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상황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를 규명

2.6. 주요 관찰 사항 및 향후 제안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이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이 매년 한 차례씩 주최하여 2005년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을 끝으로 ‘제1 라운드’가 완료되었음. 3년간 세 차례 국제심포지엄에서 모두 35개 논문이 발표되는 등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6년 우리나라가 개최할 예정인 제4회 FANEA 심포지엄에서는 참가 대상을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주제 발표자를 엄선하여 보다 유익하고 내실 있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FANEA 국제심포지엄 제1라운드(2003~2005) 분야별 발표 논문

분야	제목	저자(소속)	비고
농업협력 (6편)	<input type="checkbox"/> 한중일 농업구조 분석 - 역내 농업 협력 가능성	어명근(KREI)	제1회
	<input type="checkbox"/> 한중일간 농업경제연구 방향설정	쭈에구이씨아(IAE/CAAS)	제1회
	<input type="checkbox"/> 동북아지역 농정연구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이동필(KREI)	제1회
	<input type="checkbox"/> PRIMAFF 내의 연구협력 활동 개괄	치바 오사무(PRIMAFF)	제1회
	<input type="checkbox"/> 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우샤오허(IAE/CAAS)	제3회
	<input type="checkbox"/> 한중일 농촌경제협력의 선택 - 1차 상품 유통 조직 혁신	우시우웬(길림성정부 농촌경제정보센터)	제1회
식량안보 (4편)	<input type="checkbox"/> 중국의 식량안보정책과 유통체제개혁	슈샤오칭(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제2회
	<input type="checkbox"/> 일본의 식량안보문제와 정책방향	마사토 이토(PRIMAFF)	제2회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식량안보문제와 정책반응	임송수(KREI)	제2회
	<input type="checkbox"/> 중국의 곡물 수급 균형분석	주시강(IAE/CAAS)	제2회
식품안전 (3편)	<input type="checkbox"/> 중국의 농업표준화 개발의 현황과 쟁점들	슈샤오준(중국농업부 시장경제정보과)	제2회
	<input type="checkbox"/> 유전자변형 곡물 - 국제식품체제에의 영향	타치카와 마사시(PRIMAFF)	제2회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식품안전체계	최지현(KREI)	제2회

분야	제목	저자(소속)	비고
농업 교역 (6편)	<input type="checkbox"/> 도하 개발 의제 이후의 중국의 농업통상	리우샤오허(IAE/CAAS)	제1회
	<input type="checkbox"/> 동북아 국가의 농업무역 흐름과 쟁점들	권오복(KREI)	제2회
	<input type="checkbox"/> 세계 쇠고기 무역의 구조 변화와 그 영향: Aglink 모형을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	우에바야시 아쓰유키(PRIMAFF)	제2회
	<input type="checkbox"/> 동북아 농업교역문제 연구에 대한 토론	리우샤오허(IAE/CAAS)	제2회
	<input type="checkbox"/> DDA 이후 한국 농업 전망 - 한국의 쌀산업을 중심으로	서진교(KREI)	제1회
	<input type="checkbox"/> 일본의 채소수입 동향과 수입 채소유통의 특징	고바야리 시게노리(PRIMAFF)	제1회
농촌개 발 및 불균형 문제 (11편)	<input type="checkbox"/> 농가계층변동의 특징과 요인	하시즈메 노보루(PRIMAFF)	제1회
	<input type="checkbox"/>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유경희(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	아이카와 요시히코(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한국에서의 도농 간 발전 격차 실태	박시현(KREI)	제3회
	<input type="checkbox"/> 중국의 농촌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왕상구이(IAE/CAAS)	제3회
	<input type="checkbox"/> 농촌의 불균형	상리(IAE/CAAS)	제3회
	<input type="checkbox"/> 농지 이용의 구조적 변화 - 차지/대규모화의 진행과 농지 이용의 후퇴	오노 도모야키(PRIMAFF)	제1회
	<input type="checkbox"/>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문제	하시주미 노보루(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도농 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에가와 아키라(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실태	김정호(KREI)	제3회
<input type="checkbox"/>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정책	리센터(IAE/CAAS)	제3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환경 (5편)	<input type="checkbox"/> 농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다카하시 요시푸미(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제	고다모토유키(PRIMAFF)	제3회
	<input type="checkbox"/>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KREI)	제3회
	<input type="checkbox"/> 순환경제메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관리	주리즈(IAE/CAAS)	제3회
	<input type="checkbox"/>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후즈첸(IAE/CAAS)	제3회

3. 공동연구

3.1. 목적

- 한·중·일 공동 연구는 동북아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간 지식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3국간 농정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활동임.

3.2. 개요

□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한 역내 농업협력 증대방안

- 연구기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中國農業部農村經濟研究中心)
- 연구책임자: 커빙성(柯炳生) 박사
- 연구기간: 2005. 7 ~ 2005. 9(3개월)
- 주요내용:

1) 연구목적

- 세계화와 지역자유화의 과정에서 각 국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함. 동북아자유무역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3국 농업발전의 신전략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국 농업자원과 농업발전 상황을 기준으로 FTA가 초래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3국 농업이 FTA에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 공동 연구의 목적은 경제학 측면에서 한·중·일 FTA 체결이 3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3국 농업자원, 농업발전상황 및 농업정책방침을 파악하여 3국 농업 공동발전의 전략조치를 연구하며, 3국 농업 국제 분업체제의

경로를 모색하는 데 있음.

2) 주요 연구 내용

가. 한·중·일 3국 농업자원 및 농업발전 상황

- 3국 주요 농업자원 및 개발이용 상황(토지, 수자원, 기후, 노동력 등)
- 3국 농업발전상황(생산량, 무역량, 상품구조 등)
- 3국 농산물무역수지공헌도(CBT) 분석

$$CTB_i = ((X_i - M_i) - (X - M)(X_i + M_i)/(X + M))/GDP$$

- 3국 주요 농업정책 및 발전 목표

나. 한·중·일 3국 농업의 상호 보완성 및 경쟁력

- 3국 주요 농산물의 시사성 비교우위
- 3국 농산물 무역의 상호 보완성 및 경쟁력(OBC지수) 분석: GTAP 모형이 제공하는 무역데이터 이용하여 완성

다. 한·중·일 FTA 체결이 3국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 GTAP 모형지역 및 상품구분
- 2010년 기준방안
- FTA 시뮬레이션
- FTA가 3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라. 한·중·일 지역 내 농업시장 확대 및 공유

- 지역 내 농업자원의 고효율 이용방안
- 지역 내 농업협력방안
- 지역 내 농산물의 차별화 및 특화방안

마. 한·중·일 농업의 국제 분업 체제 건립

- 지역 내 농업분야의 수직성 분업
- 지역 내 농업분야의 수평성 분업

바. 정책 건의

- 각국 농업정책조정 및 지역 내 협력방안
- 국제 농업협상에서의 한·중·일 공조방안

3) 주요 연구결과

- 이 연구에서는 먼저 토지, 기후, 인구 등을 포함하는 한중일 3국의 농업자원과 농업생산구조, 농산품무역, 농업정책 등 농업발전 현황 전반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음. 그리고 이어서 3국의 주요 농산품이 가지는 상대적 비교우위와 농산품 무역에서의 상호 보완성 및 경쟁성에 대해 분석하였음. 셋째, 글로벌 무역모델(GTAP)을 활용해서 한중일 FTA 협정의 세 가지 방안이 한중일 거시경제 및 각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음.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수입관세 인하가 가져오는 효과만을 보여 주기 때문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FTA의 자본과 기술의 이동 촉진으로 나타나는 동태적 효과, 즉 농업의 국제분업 방법과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음.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였음.
- 한·중·일 3국의 FTA 구축은 한국과 중국 농업에 모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축산품과 가공식품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중국의 곡물과 채소 생산이 늘어날 것임. 일본은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에는 유리할 것으로 나타남.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한중일 FTA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임. 물론 전반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역내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임.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3국은 식량안보와 농산품 품질 안전, 농업의 과학적 연구 및 기술, 농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사무와

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3국 농업의 자연자원과 사회경제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고 역내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4) 참여 연구진

	성명	직업	연구 분야	학위	소속
연구책임자	柯炳生	주임, 교수	농산물무역, 농업경제	박사	농업부농촌경제 연구센터
주요 연구참여자	韓一軍	연구원	농산물시장 및 무역	석사	상동
	王 莉	연구실습원	농산물 무역, GTAP모형	석사	상동
	馬永良	부연구원	일본농업 전문가	박사	상동
	翟雪玲	연구원	농산물무역, 농업재정	박사	상동
	李衆敏	연구조원	농업무역	박사과정	중국인민대학
	張宇萍	연구조원	농업무역	박사과정	상동
	汪曉敏	부처장	국제교류협력	학사	상동
연구자문	鄭靖吉	연구위원	중국농업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田維明	교수	농산물시장 GTAP모형	석사	중국농업대학

□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과 정책분석 D/B 구축 및 모델링

- 연구책임: KREI 권오복 박사, IAE/CAAS의 리우샤오허 박사
- 추진경과:
 -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과 정책분석 D/B구축 및 모델링에 관한 1차 연구 성과는 제2회 FANEA 심포지엄에서 특별세션을 두어 양국의 연구자가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음.
 - 2005년 10월 26일에 개최된 무역모형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측은 한중일 3국 간 농산물 무역모형을 구축하려던 당초 계획 대신 기존 GTAP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하였다고 설명.

- 한·일 양측은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생산구조를 투입체계에 할당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역내 농산물 무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GTAP의 지역과 부문을 구분 및 재분배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함.
- 개편된 무역 모형은 4지역(한·중·일, 나머지 세계), 32 품목(농산물 18개)으로 구성. 기타 잡곡으로 분류된 옥수수과 과일 및 채소류의 대체탄력성을 구분하는 문제, 한·중·일 3국의 투입산출표(I/O Table) 연도(2001년)와 GTAP 버전(Version 6)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일본측은 이러한 작업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중국이 답변. 중국은 구축된 DB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하겠다고 제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류 교수가 퍼듀대학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참고(www.purdue.ac).

4. 초청세미나

4.1. 제1회 초청세미나

- 주제: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 초청연사: 한광수 인천대학교 국제통상대학장
- 일시 및 장소: 2005년 1월 19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중회의실
- 참석인원: 부원장 포함 원내 연구진 및 농림부 공무원 등 20여 명
- 발표요약:

- 중국의 경제발전은 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음. 중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주요 경협 상대국으로 떠오른 한국과 한반도가 이러한 중국경제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임. 오히려 중국경제의 변화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오늘날 한·중 양국은 수교 12년의 짧은 교류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음. 특히 중국은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한 차제에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여기고 있음. 이러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 안보를 비롯하여 거의 전면적임.

-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세 개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임. 무역, 투자,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급상승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추월하였음.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급증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도 지속되고 있음. 둘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른 영향임. 중국을 21세기 최대 경쟁상대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은 대중국전략을 세계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의 양날의 칼을 구사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시장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과 연계된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도 증권시장 및 직접투자 참여 등 자본 진출에 적극적임. 한국에도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IMF 관리체제 이후 미국 등 서방 자본의 진출이 뚜렷해졌음. 그들은 한국에 불고 있는 중국경제 붐에 편승하는 한편, 급속하게 중국경제에 흡수되어 가는 한국 시장을 신자유주의 경제에 편입시켜 이들 시장에서 그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셋째는 북한의 변화를 통한 영향임. 오랫동안 중국의 변화를 외면해 오던 폐쇄체제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남북대립에서 남북화해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 중국의 체제개혁 모델을 이어받으려 하는 북한이 당장은 ‘북핵 문제’로 미국과 대적하고 있음. 이 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하여 미·중간에 한

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임.

- 중국경제가 앞으로 순조롭게 발전하건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하건 우리는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은 우리 뿐 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 이 점에서 ‘원원 전략’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점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오늘날 중국경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따라서 그 영향도 급격하며 충격적일 뿐 아니라 기민한 대응이 아니면 실효성을 잃게 되어 ‘기회조차 위기로’ 뒤바뀌는 어려움을 맞보게 될 것임. 메릴린치나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존 나이스 비트 등 외국 투자자나 전문가들은 한국을 부상하는 중국경제의 최대 수혜국으로 봄.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경탄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부화뇌동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함. 중국에 대하여 잠재력 큰 내수시장과 제3국 시장을 겨냥하여 부품과 소재, 저임금 활용을 위한 대중국 투자를 적극화하는 한편, 투자를 전략적으로 분업화하여야 할 것임. 둘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 부상의 영향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 그만큼 포괄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우리 사회는 중국 변화의 영향으로 중국자체와 미국, 북한을 통한 충격은 물론 일본, 동남아, 러시아, EU 등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을 겨냥한 국제적인 무역, 투자 및 금융의 흐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고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셋째,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불안정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임.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영향은 불확실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임.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승하면서 한중간의 사업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중국경제가 아직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스의 영향과 올 봄 긴축정책의 파장 등 중국의 경기변동 조짐에 우리 경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위안화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

국경제의 구조적 이해 없이 알레르기적 반응이 유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음. 이러한 경향은 중국경제에 대한 좌충우돌식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넷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 역학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은 미중관계이며, 북핵 문제나 남북한 관계도 그 하부구조로 볼 수 있음. 여기에 대외적인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내 정치의 안정이 대전제임은 물론이다. 다섯째,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지난 1990년대에는 ‘서해안시대’, 그리고 2000년대에는 ‘동북아중심시대’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 그러나 중국경제의 갑작스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중국경제의 변동이 일시적일지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임. 정부와 기업은 이 점에 대해서 협력하여 대처하는 시스템을 예비하여야 할 것임.

4.2. 제2회 초청세미나

- 주제: 중국의 농산물 국제교역과 경쟁력
- 초청연사: Dr. Weng Ming(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 일시 및 장소: 2005년 7월 7일(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태동관 다산홀
- 참석인원: 동북아농정TFT 팀원 및 원내 연구진 등 20여 명
- 발표요약:

(1)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 2004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514억 달러로 2003년보다 27.4% 증가하였음. 이 중 수출액은 2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9.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8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48.1% 증가하였음.
- 농산물 수출입액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EU를 단일 국가로 간주할 경우, 중국은 세계 4위의 농산물 무역국임. 한편,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2003년부터 농산물 수입 증가율이 수

출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 약 46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함. 곡물은 순수입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대두의 수입량이 최고에 달하였으며 면화와 식용유의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2)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곡물류 생산이 최근 4년 동안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1996년 이후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식량 생산이 5억 톤을 초과하지 못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2년 동안 외부적 기술 장벽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에 아주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농산물의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만을 강조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인함. 또한 낮은 산업수준, 낙후된 제도적 기반 및 국제경험 부족 등도 중국의 농산물 교역 증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3)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 중국의 밀, 옥수수, 대두가 이미 비교우위(DRCC)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밀, 옥수수 생산능력은 국내 기초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그러나 대두의 경우 일정 기간 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음(국내시장자료)
- FAO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채소 수출액은 세계 5위를 차지하였음. 중국의 신선채소 수출액은 전 세계에서 약 8%를 차지함. 예를 들면, 중국 대부분 채소의 DRCC는 0.3이하임. 예컨대 마늘은 0.14, 감자 0.28, 무는 0.21로 나타나 중국의 채소가 국제시장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채소의 무역경쟁지수(Trade Competitive Index)는 1995년 0.988에서 2002년 0.933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 주요 원인은 생산비, 특히 인건비의 상승,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력, 선진국의 채소 품질과 안전기준 급변, 그리고 기술 장벽에 의한 수출 부진 등임.

- 과일은 사과와 사과 주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축산물은 가격우위는 있으나 품질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짐. 축산물 비교우위 지수(RCA)는 1996년 0.922에서 2002년 0.203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쇠고기는 0.078에서 0.018, 돼지고기는 0.426에서 0.277로 하락하였음.

(4) 한·중 간의 농산물 교역

- 한국과 중국은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임.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 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농산물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임. 2003년에 미국으로부터 33.4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26.1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였음.
- 중국은 2000년 이후 농산물에 대한 표준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중국은 식량작물만 국가가 통제하고, 기타작물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저급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되어 중국농산물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임.
- 양국은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농업의 공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5. FANEA 홈페이지(www.fanea.org) 운영

5.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목적

- 동북아지역의 농업, 농촌분야의 연구 결과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정보교류 촉진
- 동북아지역 농업 및 농촌분야 연구협력에 관심을 가진 역내 국가의 해

당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네트워크 형성 및 자료의 D/B 구축

5.2. 주요 구성

- 공지사항(Notice):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정보 공지
- 심포지엄(Symposium):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관련 프로그램 및 발표 논문 등재
- 출판물(Publication): 동북아시아 농업 관련 발표 논문 및 자료 등재
- 이슈(Issues): 동북아시아 농업의 현안과 동향에 관한 정보 게재
- 토론(Discussion): 회원 간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 회원가입(Membership):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 등록(전공분야, 연락처 등)
- 관련사이트(Related link): 동북아시아 국가(한중일 중심)의 농업 및 농촌 관련 기관 링크

5.3. 관리 및 운영 성과

- ‘FANEA 국제심포지엄’ 콘텐츠 재구성
 - FANEA 국제심포지엄을 배너(banner) 형식으로 제작, 설치하여 해당 콘텐츠를 부각시켰고, 프로그램별로 발표논문과 자료를 링크하여 자료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재구성하였음.
- 일본 및 중국과 FANEA 홈페이지 공동관리자(Joint Webmaster) 선정 및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 활성화
 - 각 국의 공동관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자 자국어와 영어

로 홈페이지상의 각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의 등재를 가능토록 하였음.

- 공동관리자: 한근수 전문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Hayakawa Tadashi (일본 PRIMAFF), Lijian Huang(중국 IAE/CAAS)

- 공지사항(Notice) 개선

- 동북아농정TFT 구성, 각 기관별 학술회의, 국제 세미나 개최,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기관장회의 개최, FANEA 국제심포지엄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지함으로써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 관련 기관 링크 보강

- 기술적 오류 보완

6. 기타 대외 학술 협력 활동

6.1. ‘제2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05. 9. 25(월) 10:00~18: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태동관 다산홀
- 주제: 동북아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 개최 취지:
 - 최근 WTO와 FTA에 의한 급속한 시장개방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에서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곡물의 경우 동북아는 북미와 남미의 거대 수출 시장으로 고착화하고 있음.
 - ‘동북아 농업농촌발전’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3국의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망, 과제 발굴 등

정보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목적임.

- 지난해(중국 길림농업대학 개최)에 이어 2회째인 금년도는 쌀 시장개방에 따른 쌀산업의 실태 파악과 미래 전망을 시도하는 심포지엄을 통하여 동북아의 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쌀은 동북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 품목으로 위치하고 있음. 3국 모두 소맥, 옥수수, 그리고 대두 등은 대량 수입국임. 그러나 쌀은 한국과 일본은 공급과잉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관세화 유예 또는 고율 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쌀에 대하여, 시장개방의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의 현상과 문제,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북아 쌀농업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함.

○심포지엄 일정

개회식

10:00 원장

10:20~12:20

제1세션 동북아 쌀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응 과제

- 좌 장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1주제 동북아 곡물문제와 쌀농업 과제(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주제 동북아 쌀 수급 및 전망(이태호 서울대학교)
- 제3주제 한국 쌀농업의 구조 변화(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정토론 한두봉(고려대학교), 이일영(한신대학교)

12:20~13:30 기념사진촬영, 점심(원내식당)

13:30~15:30

제2세션 동북아 쌀농업의 생산구조 변화

- 좌 장 장월걸(중국 길림농업대학)
- 제4주제 일본의 쌀 생산조정지 변천과 과제(안도 이바라기대학)
- 제5주제 중국의 구조 개혁과 농민의 대응(사카이 일본 토야마대학)
- 제6주제 중국 길림성 쌀농업 구조 변화(姜 會明 중국 길림농업대학)
- 지정토론 고재모(협성대학), 서세욱(국회 예산정책처)

15:30~16:00 휴식

16:00~18:00

제3세션 동북아 쌀농업의 유통구조 변화와 대응

- 좌 장 사카이 토미오(일본 도야마대학)
- 제7주제 중국 길림성 쌀 유통개혁과 과제(장월걸 길림농업대학)
- 제8주제 일본 쌀시장 개방 이후 쌀 유통과제(冬木勝仁 일본 동북대)
- 제9주제 한국의 농협 쌀유통의 과제(전찬익 농협조사연구소)
- 지정토론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준순(PN라이스)

18:00 폐회

18:30~20:30 만찬

○ 현지견학

9월 27일(화)

8:30- 호텔 출발

10:00- 安城市 古三農協

- 안성시 쌀농업의 개황과 과제
- 안성시 농업과 농협의 역할

12:00-13:00 점심

13:00-15:00 현지견학(RPC, 친환경생산)

15:00-18:00 현지주민과의 의견교환

참가자(농협, 농가, 시, 언론 등 20인)

숙박(안성)

9월 28일(수)

9:00-12:00 농가 조사(쌀농가 2호)

12:00-14:00 서일농장(견학, 점심)

14:00 귀경, 하나로클럽(양재점)

○ 국외참가자

1) 중국(4인)

張 越杰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교수

韓 星煥 길림농업대학 인문법정학원 원장, 교수

姜 會明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농업경제관리학과 교수

趙 貴玉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경영학연구실 강사

2) 일본(4인)

酒井 富夫 富山大學 극동지역연구센터 부소장, 교수

安藤 光義 茨城大學 農學部 조교수

冬木 勝仁 東北大學 大學院 조교수

李 麗原 東京農工大學 大學院生

-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길림농업대학(중국), 토야마대학(일본)
 - 제3회 개최는 일본 토야마대학(富山大學)

- 경과 : 제1회 심포지엄
 - 1) 개최 기관 및 일자
 - 중국 吉林農業大學(길림성 장춘시 소재)
 - 2004. 8. 15~20
 - 2) 심포지엄 주제
 - 제1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곡물시장개혁과 농업구조
 - 3) 개최일정
 - 8. 15 장춘시 도착
 - 8. 16~17 심포지엄(길림농업대학)
 - 8. 18~19 현지견학(옥수수 재배 농가, 도매시장, 사료제조회사 등)
 - 8. 20 국외참가자 귀국
 - 4) 참가기관
 - 한국 : KREI, 농정연구센터, 농협중앙회, 한신대학
 - 일본 : 富山大學, 茨城大學, 農政調査委員會 등
 - 중국 : 吉林農業大學, 中國農業大學 등
 - 5) 비용
 - 참가자 자기부담
 - 심포지엄 개최비용은 개최기관 부담

6.2. KREI 세미나

- 일시: 2005. 4. 29(금) 11:00~12: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연당
- 참석인원:
 - 한국: 이정환 전임원장, 어명근 동북아농업팀장 외 원내 연구진

- 중국: Dr. Qian Keming(소장), Dr. Li Suoping
- 일본: Dr. Nishio Takeshi(소장), Dr. Watanabe Yasuo
- 주제발표:
 - 일본(Dr. Watanabe Yasuo): 지난 3월 고이즈미 내각에 의해 결정된 “일본의 식품,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본 계획” 소개
 - 중국(Dr. Li Suoping): 중앙 제1호 문건(No. 1 Document)상의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 소개

부 록 1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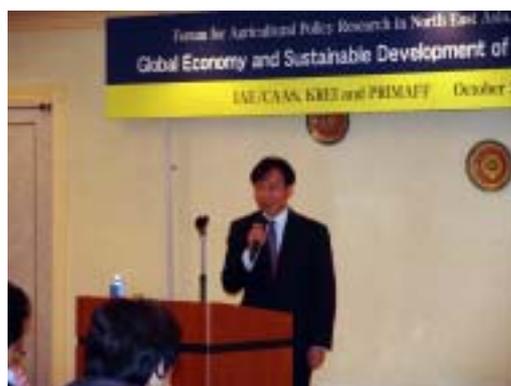
3개 기관장(최정섭 한국 KREI 원장, 니시오 타케시 일본 PRIMAFF 소장, 친 푸 중국 IAE/CAAS 소장)



최정섭 한국 KREI 원장(개회식)



니시오 타케시 일본 PRIMAFF 소장(개회식)



친 푸 중국 IAE/CAAS 소장(개회식)



이노구치 구니코 의원(심포지엄 기조연설)



김정호 KREI 선임연구위원(제1 세션 발표)



이용선 KREI 연구위원(제1 세션 토론)



시마모토 토미오 PRIMAFF전임소장
(제1 세션 좌장)



김태곤 KREI 연구위원(제2 세션 토론)



박시현 KREI 연구위원(제3 세션 발표)



어명근 KREI 연구위원(제3세션 좌장)



김창길 KREI 연구위원(제3세션 발표)



행사장 전경



DG/President Meeting

부 록 2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 KREI 선임연구위원)
- 한국에서의 도농 간 발전 격차 실태
(박시현, KREI 연구위원)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 KREI 연구위원)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의 제기

농업부문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양극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가 구조는 중간 계층이 비대한 ‘중농표준화’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농업정책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농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가 및 지역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농업의 양극화 문제를 단적으로 말하면, 농가는 대다수가 영세농층으로 퇴적하는 반면에 생산은 소수의 대농층으로 집중되는 경향이며, 대농이 많은 평야지역 농업은 성장하는 반면에 소농 중심의 중산간 지역은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교역 조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농가 계층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농 규모의 확대를 추구해 온 대농은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농은 대부분이 고령농가로서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농과 중산간 지역은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산업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또는 지역간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갈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농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2.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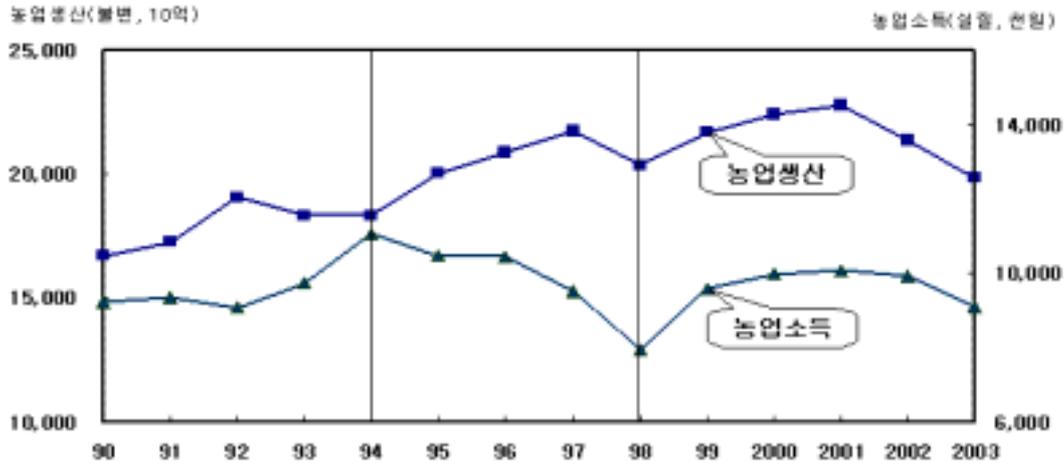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농업 생산과 농가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한 다음,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한 농가 분화와 지역농업 분화의 동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2.1. 농업의 여건 변화: 성장과 소득의 괴리

1993년 말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타결과 1995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한국 농업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로 진입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에 착수하였다. 199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총 4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농업구조 개선의 목표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졌으며, 따라서 농업 투용자의 상당 부분이 생산기반 정비와 기계화, 시설자동화 그리고 경영규모 확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용자의 효과는 다른 아닌 농업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의 공급에 비하여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못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선진국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이른바 생산성 증가로 농업은 성장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 농업생산과 농업소득 추이



자료: KREI 거시모형(ASMO)을 이용한 추정결과.

<그림 1>은 1990년 이후의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이 변화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농업부문의 재정투입자가 크게 확충된 1994년 이후 농업 고정자본은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1994~'03년간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1.5%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인하여 농산물 실질가격은 1994~'03년간 연평균 1%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 농업소득은 1994~'03년간 연평균 1.8%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시장개방의 영향을 반영하여 농업 성장은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농업 생산은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는 성장 작목과 그렇지 못한 쇠퇴 작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채소와 축산이며, 특히 축산은 상대적으로 생산액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0~2000년간의 연평균 변화율을 보면,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축산이 연평균 2.41%로 가장 높고 채소 2.86%, 과일 1.11%, 특작 기타 0.1% 등의 순이다. 식량작물은 1995~

2000년간에는 성장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며, 과일은 최근 들어 성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다.

표 1.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추이

단위: 10억원(1995년 기준)

구 분	식량작물	채 소	과 일	특작기타	축 산	합 계	
1990년	10,707 (41.2)	4,738 (18.2)	2,125 (8.2)	2,614 (10.1)	5,790 (22.3)	25,974 (100.0)	
1995년	8,539 (32.8)	6,145 (23.6)	2,704 (10.4)	2,505 (9.6)	6,109 (23.5)	26,002 (100.0)	
2000년	10,388 (35.8)	6,283 (21.6)	2,374 (8.2)	2,634 (9.1)	7,346 (25.3)	29,027 (100.0)	
2002년	9,379 (33.2)	6,338 (22.5)	2,050 (7.3)	2,778 (9.8)	7,675 (27.2)	28,219 (100.0)	
연평균 변화율 (%)	90-95	-4.42	5.34	4.93	-0.85	1.08	0.02
	96-00	4.00	0.44	-2.56	1.01	3.76	2.23
	90-00	-0.30	2.86	1.11	0.08	2.41	1.12
	00-02	-3.35	0.29	-4.79	1.78	1.47	-0.94

주: 생산액은 3개년 이동평균. 특작기타에는 특용작물과 화훼를 포함.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에서 작성.

2.2. 농가의 계층 분화

2.2.1. 대농과 영세농의 양극화

농가계층 분화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도 대략 네 단계를 거처온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1960년까지의 양극 집중, 1980년대 초까지의 중농 집중,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이다. 특히 최근의 계층분화 경향을 보면,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할 정도로 분화분기점이 계속 상향이동하고 있으며, 중간규모 계층이 감소하고 0.5ha 미

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경향이 명확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세농 층과 대농 층으로의 양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대농 층이 비대해지는 것은 농업구조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농가의 경영규모별 분화는 영농형태별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영농형태별 농가계층 분화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대농 층으로 농지나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농업총조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990년에 호수로 1.2%, 면적으로 6.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중이 3.8%, 면적 비중이 20.0%로 증가하였다. 또, 한우는 20두 이상 농가가 1990년 호수 비중 1.1%, 두수 비중 14.1%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중 6.5%, 두수 비중 49.9%로 높아졌다.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하며, 특히 양계는 1만 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2.7%가 전체 생산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추이

단위: 천호, %

연도	전체 (비율)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1990	1,743	(100.0)	27.7	31.2	20.2	11.0	7.4	2.5
1995	1,477	(100.0)	29.3	29.3	18.0	10.3	8.4	4.8
1997	1,417	(100.0)	30.9	29.0	17.1	10.0	8.1	4.9
2000	1,369	(100.0)	32.2	27.7	16.0	9.6	8.3	6.2
2003	1,243	(100.0)	35.5	26.7	14.9	8.6	7.6	6.7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에서 작성.

표 3. 대규모 농가의 생산집중 실태(2000년)

단위: %

구분	호수 비중	면적 비중	구분	호수 비중	두수 비중
논 3ha 이상	3.8	20.0	한우 20두 이상	6.5	49.9
밭 1ha 이상	10.6	45.2	젓소 50두 이상	26.4	54.1
과수원 1ha 이상	14.1	44.3	돼지 1천두 이상	9.8	62.1
시설 2천평 이상	10.5	47.1	닭 1만수 이상	2.7	94.1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이렇게 1990년대 중반부터 농가계층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지 등 농업자원은 대농 계층으로 집중되는 반면, 농가는 영세농 계층으로 퇴적되고 있다. 즉, 농가계층이 양극화되면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영세농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 현재 경지 0.5ha 미만의 농산물 판매액 500만원 미만의 영세농가가 전체농가의 32.8%(454천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실적이 없는 자급적 농가가 81천호에 달하고 있다.

2.2.2. 농가소득의 불평등 심화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가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세농은 1994년 이후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대농 계층의 농업소득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경제통계에서 1994~'02년간 호당 농업소득(명목) 변화를 보면, 경지규모 0.5ha 이하 농가의 소득은 5% 감소, 3~5ha 농가의 소득은 11% 증가, 5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농가소득의 원천별로 엔트로피 지수를 보면, 농외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하고 다음으로 이전수입, 농업소득, 농가소득 등의 순으로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소득의 엔트로피 지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에 0.2145에서 2002년에는 0.2429로 높아졌다.

<표 4>에서 농가소득 5분위 배율(V분위 계층의 평균소득/I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보면, 1998년에는 7.2였으나 2002년에는 8.9로 나타났다. I분위 저소득 계층의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반면에 V분위 고소득 계층의 농가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2000년 이후 농가 간에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농가소득의 최근에 들어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소득계층간 불평등 격차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표 4. 5분위 계층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

계 층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I (A)	5,886	5,819	5,999	5,854	5,503
II	12,373	12,954	13,540	13,304	13,069
III	17,807	18,829	19,542	19,471	19,027
IV	24,697	26,546	27,010	27,455	27,468
V (B)	42,526	46,337	45,767	46,834	49,070
V분위 배율(B/A)	7.2	8.0	7.6	8.0	8.9

자료: 박준기 외(2005).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 결과.

2.3.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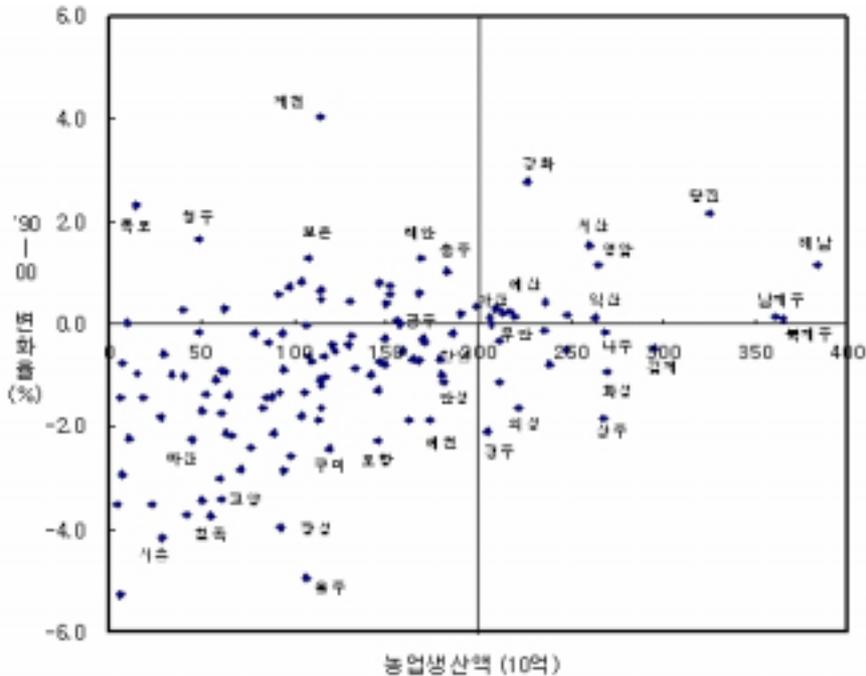
2.3.1. 지역농업의 생산력 격차

앞 장에서 1990년대 이후 농업생산의 전국적인 흐름으로 생산성 향상의 추이를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농업생산 변동이 지역농업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동향을 보기로 한다. 다만, 시군별 농업통계가 일부 지역에만 산출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농업총생산액(GRDP)을 이용하여 시군의 경지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을 추정하였다.

<그림 2>는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규모와 1990~2000년간 변화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총생산액이 많고 성장하는 지역, 총생산액은 많지만 쇠퇴하는 지역, 총생산액은 적으나 성장하는 지역, 총생산액도 적고 쇠퇴하는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이 답작지대와 전작지대와 같은 경지이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표 5>는 시군의 논 비율로 구분하여 농업총생산액을 집계한 것인데, 논과 밭이 고루 분포한 중간지대에 비하여 답작지대와 전작지대에서 농업성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농업이 양극화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서남해안의 대단위 평야지대나 강원도 고랭지 농업지대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답작지대 또는 고랭지 농업지대는 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지역으로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안정적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림 2. 농업총생산액(실질)과 변화율의 시군 분포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와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추정.

표 5. 논 비율별 시군별 평균 농업총생산액 변화

단위: 백만원, %

논비율 연도	논 75% 이상 답작지대	논 75~50% 준답작지대	논 50~25% 준전작지대	논 25%미만 전작지대	전 체
1990년	112,095	92,745	49,206	49,852	87,314
2000년	142,656	106,678	46,814	61,725	91,203
연평균 변화율	2.44	1.41	-0.50	2.16	0.44

주: 금액은 1995년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와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추정.

2.3.2. 농촌인구 감소와 중산간지역의 공동화

평야지역과 도시근교의 농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중산간 지역의 농업은 쇠퇴하는 경향이다. 특히 경지 조건이나 시장 조건이 모두 불리한 중산간지역은 농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투자도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산간지역에서는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농촌 인구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 농촌지역인 읍면 인구 비중은 1980년 42.7%에서 2000년 20.3%로 감소하였다. 또한 <표 7>과 같이 인구 2천명 미만의 면이 1985년에 9개에서 2000년에는 170개로 증가하고 1천명 이하인 면도 17개가 발생하였다.

표 6.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성장률(1960~2000)

단위: %

연 도	전 국	도 시	농 촌		
			전 체	읍 부	면 부
1980~85년	1.6	4.3	-2.6	1.2	-4.3
1985~90년	1.4	4.1	-4.5	-5.6	-4.0
1990~95년	0.6	1.6	-2.9	-0.6	-4.1
1995~00년	0.7	1.0	-0.4	1.5	-1.6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

표 7. 농촌의 인구 과소화지역 추이

단위: 개

읍면 개수	연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2천명 미만		9	30	97	170	333
인구 1천명 미만		2	3	10	17	46	109

주: 2005년 및 2010년의 수치는 현재의 읍면별 인구 증감 추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양극화의 원인과 전망

3.1. 양극화의 원인

최근 한국 농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략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전직이나 이직이 불가능한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에 계속 퇴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1990년대에 추진한 농업구조정책은 산업적 효율성에 치중함으로써 농가간 또는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1990년대 농업구조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선진농가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농정기조는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농가를 선별하여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하는 선진농가 육성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대다수의 영세농가는 산업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회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되어 결과적으로 다수 농가의 소득 문제를 초래하였다.

둘째, 농가소득 안전장치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UR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었으나,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적

절한 직접지불 정책이 개발되지 못하고 농업생산과 구조개선 위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확대시켰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였으나, 한국은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중앙정부 중심으로 획일적인 시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농업정책이 지역적으로 접근하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이 향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계획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경쟁력 있는 분야·품목·경영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농업구조개선사업,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파생시킨 것이다.

3.2. 전 망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가의 계층 분화로서 영세농과 대농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영세농과 겸업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비가 보상되므로 앞으로도 소규모 영농을 계속함으로써 영세농의 퇴적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02년 쌀생산비 통계에 의하면, 영세 자작농의 10a 당 소득은 75만 7천원으로 대농의 임차지 소득(55.4만원)보다 높으며, 쌀 가격이 50% 하락하더라도 10a 당 약 28만 7천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영세농이 농업에 잔류할 수 있는 경제적 존립조건인 셈이다.

한편, 농업경영주가 고령화되면서 은퇴농가의 농지가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에 모아지는 등 상층농으로 생산 집중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2000년의 60세 이상 고령 경영자 수는 201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00년 현재 70세 이상 경영주의 보유농지는 약 16만ha에 달하는데, 이들 농지는 10년 내에 유동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품목별 분화로서 성장농업과 쇠퇴농업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자본기술집약적인 시설원예와 축산은 성장하는 반면, 벼농사 등 토지이용형 농업은 정체될 우려가 크다. 최근까지 한국 농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벼농사는 쌀 소비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하여 산업규모가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가 증가하는 과일과 채소 및 축산물 등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성을 담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지역농업의 분화로서 도시근교농업은 성장하는 반면 평야지역과 중산간지역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외소득 등의 새로운 소득원이 존재하는 지역의 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즉, 도시근교는 시설원예와 축산 등이 입지적인 유리성을 가지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야농촌은 대규모 경종농업을 중심으로 전업농이 발전할 수 있으며, 중산간지역은 농촌관광을 통하여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농업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이 쇠퇴하는 지역은 신규취농 인력도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감퇴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정책 과제와 제언

한국 농업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산업적 효율성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하였으나, 영세농과 대농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의 심화로 농촌사회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농정기조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농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전업농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농촌사회의 안정을 지향하여 중소농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10년 계획으로 수립한

농업구조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농업의 양극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국들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유럽 각국은 1970년대까지 산업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영세농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오늘날 직접지불제도는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농업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농업구조정책은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촌사회의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정책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의 발전은 경제주체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부 정책은 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과 수급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져야 한다. 개방 시대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생산조정이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 농업을 위축시키므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고, 특히 특정 농가와 조직에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를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화 진전에 따른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확충하고, 영세농에 대해서도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품목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는 농정의 대부분이 지역 농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지원이나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정책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등보조 방식을 확대하여 조건불리지역과 같이 낙후된 농촌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정호, “지역농업의 현실과 비전”, 2005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1.
- 박준기 외, 저소득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4.
- 소순렬 등, 지역농업의 격차에 관한 연구 -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과의 격차,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 이정환, 농업의 구조 전환,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이정환 외,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황의식 외,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정부 농정백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대응, 2003.

한국에서의 도시 농촌간 발전 격차 실태

박시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의 제기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실태를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국토공간상에서 도시와 농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인 사회 구성 원리, 산업구조라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대상으로 시지역을 도시 군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한다.¹

¹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3계층으로 나뉘어 진다. 1계층은 광역자치단체로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그리고 9개의 도로 구성된다. 2계층은 기초자치단체로 69개의 자치구와 74개의 시 그리고 89개의 군으로 구성된다. 3계층은 자치권이 없는 단순한 행정 구역으로 2,097의 동, 205개의 읍 그리고 1,217의 면으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치구와 시를 도시지역으로 군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부시(이를 통합시라고 함)는 주변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행정구인 읍면동을 기준을 도시 농촌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보통 그 구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분의 목적상 동부를 도시, 읍과 면부를 농촌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부와 읍부를 도시, 면부만을 농촌으로 정의

다음은 발전 격차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지역 격차(regional disparity) 혹은 지역 불균형은 주로경제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의 차이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간의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지역격차도 경제적인 요인과비경제적인 요인의 종합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발전격차를 각각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의 차이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인구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생활여건 측면에서 발전격차를 파악한다. 인구적인 요인은 그자체가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격차의 결과로서 나타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2. 경제 활동 기회의 도시 농촌간 격차

경제활동 기회의 도시 농촌의 격차도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제조업과 서서비스업 사업체 분포를 통하여 경제활동 기회의 도시 농촌 격차를 알아본다 .

먼저 제조업의 도시 농촌간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1995년 전국 제조업대비 도시지역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 수 등 주요 생산 관련 지표면에서 80% 내외였던 것이 2002년에는 약 88%로 약 8%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도시지역에서의 공장부지는 소폭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등 대부분의 지표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도시의 인구나 면적변화율인 4%포인트 내외의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제조업의 도시 지역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비스업 역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를 도시 군을 농촌으로 하지만 시를 다시 일반 시와 통합시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1. 연도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변화(2002년)

단위: %

년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부지면적
1995년	80.5	81.5	82.3	78.8	75.7
2002년	87.4	87.7	88.1	88.3	77.7

표 2. 도시 농촌간 서비스업의 비중 및 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지역구분	구분	1995년		2002년		연평균증가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촌지역	수	341,384	1,152,310	305,214	965,378	-1.6	-2.5
	(비중)	(13.9)	(11.7)	(10.9)	(8.7)		
도시지역	수	2,110,491	8,655,299	2,488,559	10,178,536	2.4	2.3
	(비중)	(86.1)	(88.3)	(89.1)	(91.3)		
전국총계		2,451,875	9,807,609	2,793,773	11,143,914	1.9	1.8

<표 2>에서보는 바와 같이 1995년과 2002년 사이에 전국서비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모두 2% 이내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각각 1.6%, 2.5% 감소한 반면, 도시지역은 2%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서비스업의 농촌분포는 사업체수 14%가 종사자수 12%에 달하던 것이 2002년에는 11%, 9%대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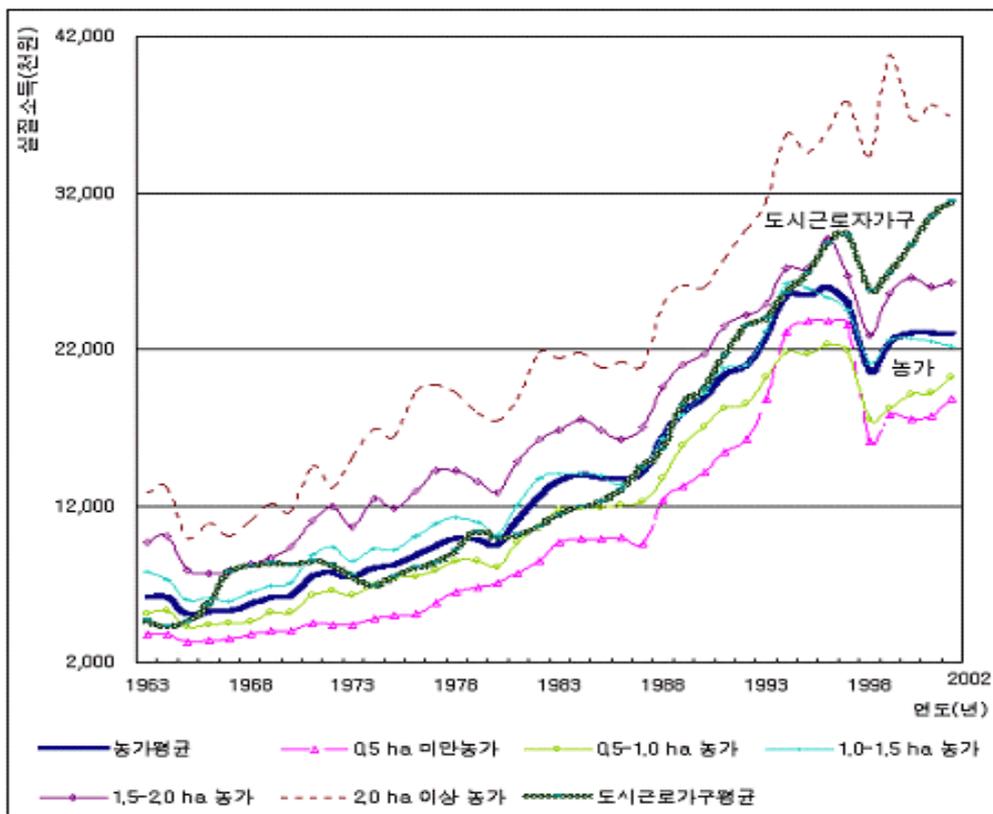
3.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가의 소득 격차 실태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와 군부의 소득통계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 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현상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지난 40년 동안 도시근로자와 농가와의 소득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1>와 같다. 1960년대 초반(1963~1965)과 1974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을 상회한 이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IMF 위기를 거치면서 두 그룹 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 수준을, 2002년에는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 도시 근로자 및 농가의 가구당 실질소득 비교

단위: 천원



자료: 이동필 외, 2004, p.71.

표 3.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실질소득 비교

단위: 천원

연도소득	1963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4,729 (1.00)	8,248 (1.00)	7,427 (1.00)	9,997 (1.00)	12,278 (1.00)	19,519 (1.00)	26,853 (1.00)	28,643 (1.00)	31,464 (1.00)
농가소득	6,130 (1.30)	6,239 (0.76)	8,243 (1.11)	9,584 (0.96)	13,849 (1.13)	19,013 (0.97)	25,530 (0.95)	23,072 (0.81)	22,981 (0.73)

주: 소득은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한 값임(2000년 기준). 괄호안의 수효는 도시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소득의 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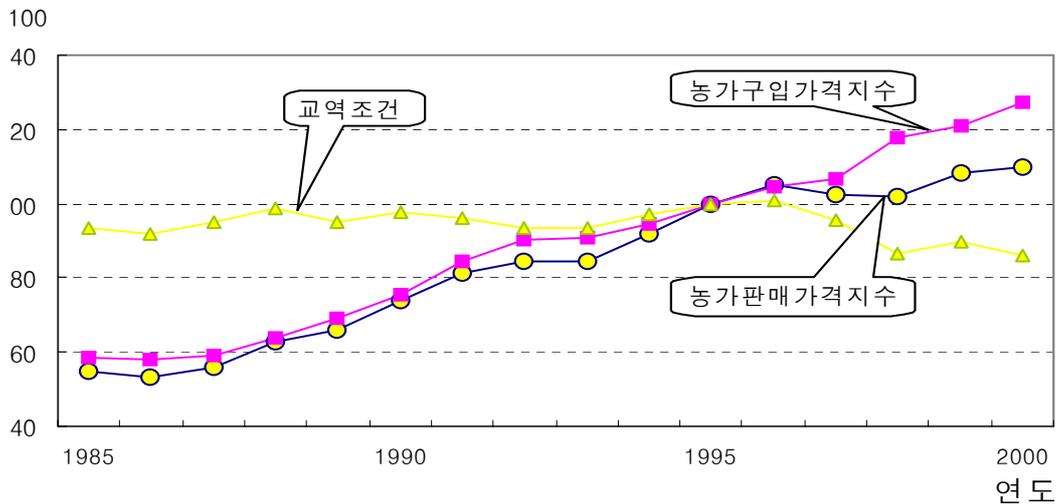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 한국은행, 2003, 『경제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이동필, 2004, p.71를 인용

한편 농가의 경지규모 계층별로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0.5~1ha 규모의 농가소득과 도시가구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초는 1.0~1.5ha 규모에서, 1990년대 초는 1.5~2.0ha 규모로, 2002년 현재는 2.0ha 이상 규모의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전체 농가 중 경지규모 2ha 이상 농가는 17만7천호로 전체농가의 14.2%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85.8%의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교역 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을 100으로 하고 비교할 때 2000년에 농산물의 판매가격지수는 109.6인데 비해 중간 투입재 구매지수는 127.5에 달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MF이후인 1997년 이후 농가의 교역조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도시가구에 비해 농가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농가의 농외소득 기회가 증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8.5%, 1990년 25.8%, 1995년에는 30.4%, 2000년에는 31.5%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점차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그림 2. 농가 교역조건의 변화



자료 : 오내원 외, 2001, p.8.

이후 농외소득 증가율이 더욱더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3차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기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경기가 후퇴한 것이 농외소득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생활 여건의 도시 농촌간 격차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농촌 투자에 힘입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여건의 격차는 매우 완화되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우월한 분야도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인 매력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농촌이 과소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서비스의 경우, 농촌은 주택보급률과 자가(自家)거주비율 등에서는 도시에 비하여 여건이 양호한 반면, 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주거시설의 편의성과 노후주택의 비중에서는 농촌이 열악하다. 특히 농촌은 수세식 화장실, 입

식부역, 난방방식 등 주택성능이나 주거의 편의성 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상·하수도 보급정도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의 경우가 크게 뒤떨어져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농촌에 고도로 집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기초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과 활용 정도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의료 및 복지여건에서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여건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농촌인구의 높은 노령화 정도와 빠른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농촌의 의료서비스 및 복지기반 확충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문화 및 체육시설 등 시설면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여건이 오히려 나은 편이지만, 문화예술단체가 빈약한 실정이라 문화예술 향유기회와 문화예술 활동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문화 및 관광 자원과 기반은 농촌지역에 집적되어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농촌지역 활성화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교통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농촌지역이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소외되고 있는 편이다.

5. 인구적 특성으로 본 도시 농촌 격차

5.1.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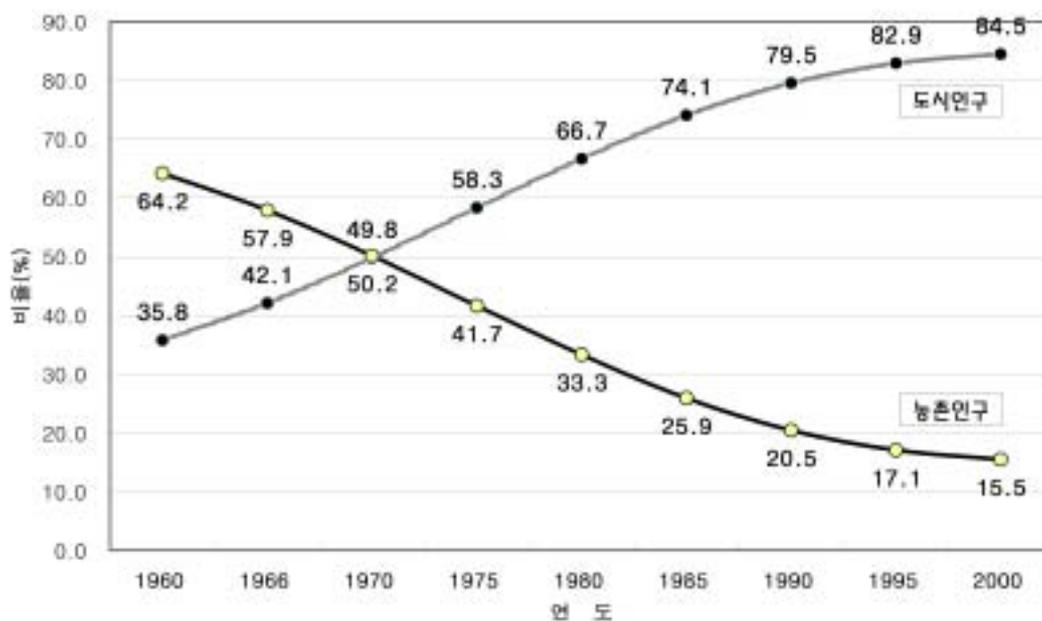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인구라고 말할 수 있다. 발전된 지역에는 인구가 증대하고 저 발전된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한 1960년대 이후 한국 전체 인구에 대한 도시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율이 1960년의

35.8%에서 2000년의 84.5%로 2.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전국 인구 약 4,600만 명의 84.5%인 3,900만 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인구가 1960년도의 900만 명 정도에서 3,000만 명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64.2%에서 2000년의 15.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간에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인 경기도 농촌인구는 1990년과 1995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지만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전남과 전북, 그리고 강원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과거 1일 생활권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면지역의 정주기반을 와해하고 있다. 1960년대 인구 1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던 면 지역은 2000년 평균 약 4,600명으로 감소하였다. 2천명도 거주하지 못하는 면이 170개나 이르고 있다.

그림 3. 도시와 농촌간 인구 분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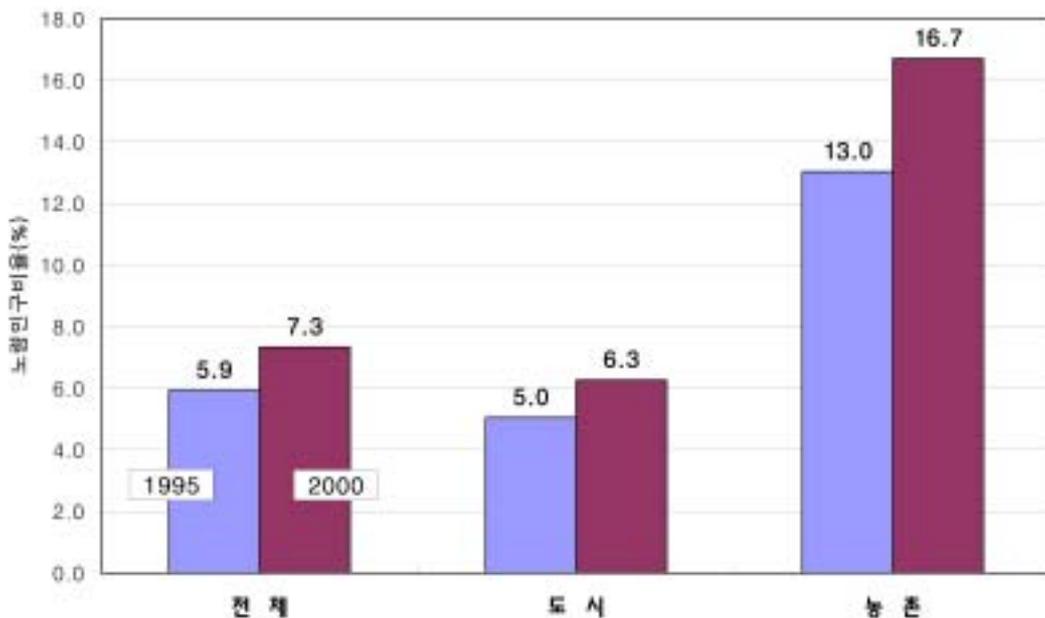
자료 : 김창현, 2005, p.168

5.2. 인구고령화

다음으로 인구고령화 정도를 도시 농촌간 비교해 본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7.3%로 UN의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상회하고 있다.

고령화의 정도를 도시 농촌간에 비교해보면 2000년 기준으로 도시의 고령 인구비율은 6.3%임에 비하여 농촌의 경우는 16.7%로 도시보다 2.6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인구비율은 UN의 고령사회 기준을 2.7%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이다. 고령화추세에 있어서도 도시인구에 비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간의 비교에서는 2000년 당시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전북 19.6%, 전남 19.1%, 경북 1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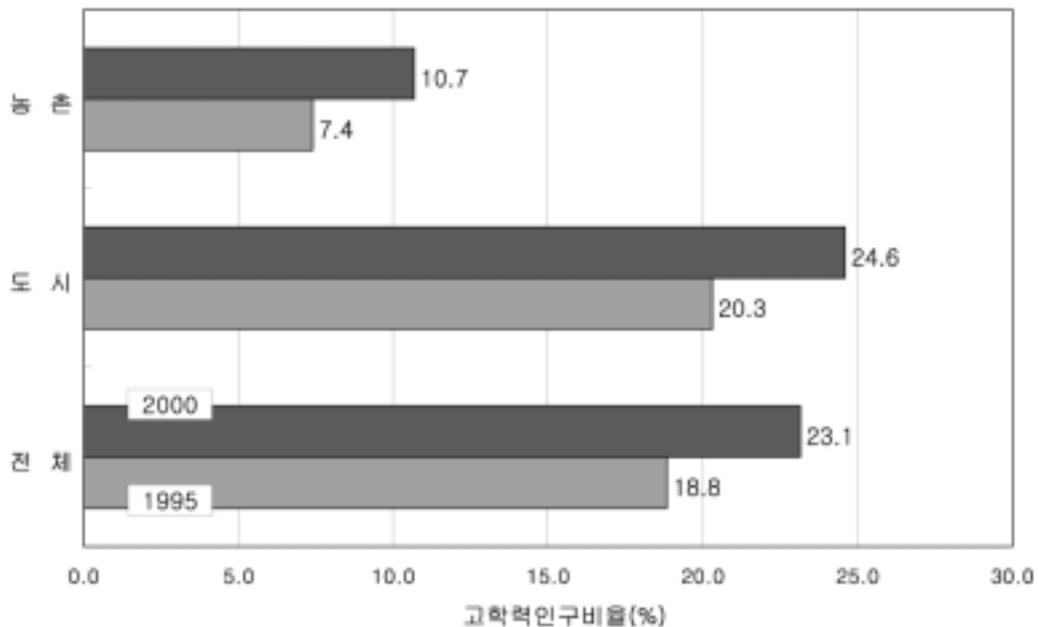
그림 4.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의 도시 농촌간 비교



5.3. 인구고학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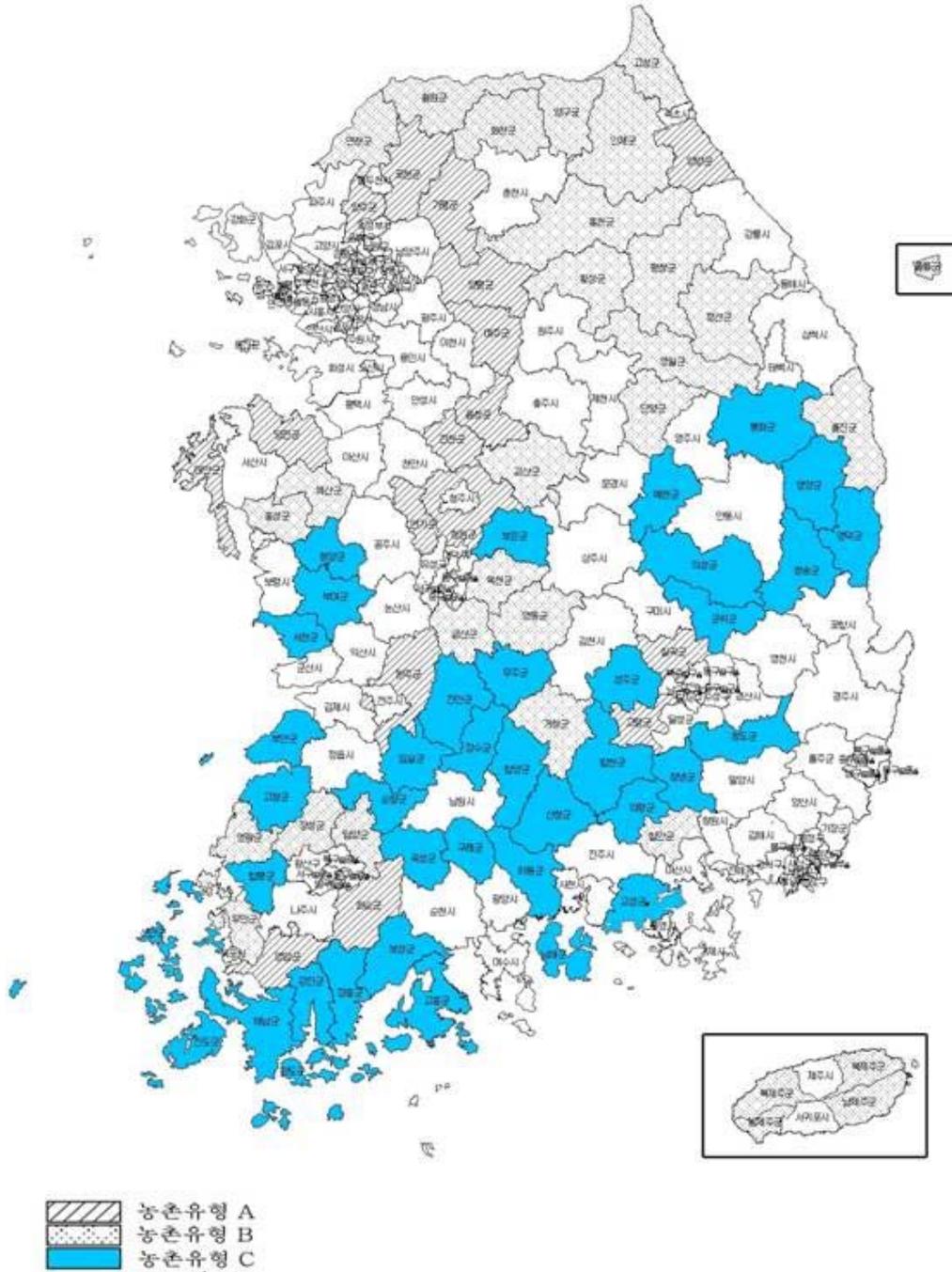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고학력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밀집되어있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전체적으로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인구는 1995년의 약 760만 명에서 2000년에는 9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6세 이상 인구에 대한 고학력인구의비중은 1995년의 18.8%에서 2000년의 23.1%로 4.3%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고학력인구비율이 1995년의 20.3%에서 2000년의 24.6%로 4.3%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그 비율이 7.4%에서 10.7%로 증가하고 있다. 고학력인구 비율의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줄어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학력인구비율의 도시 농촌간 매우 큰 실정에 있다.

그림 5. 고학력인구 비율(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도시 농촌간 비교



자료 : 김창현, 2005, p.171

그림 6. 인구특성에 기초한 농촌 유형별 위치 분포도



자료: 김창현, 2005, p.176

5.4. 농촌지역 유형

이상에서 말한 인구 특성에 기초하면 우리나라 농촌지역인 군은 대략 3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에서 ‘농촌유형 A’에 속하는 농촌은 대체로 수도권, 수도권과의 인접지역, 광주시 대구시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군(郡)들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대도시권의 광역화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유형B’의 경우 농촌지역 중에서는 농어업, 관광 등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농촌유형 C’는 전형적인 낙후지역으로서 내륙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인구 과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6. 종합

이상에서는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를 살펴보았다. 1960년대 한국에서 산업화 정책이 추진된 이래 소득면이나 생활여건에서 농촌은 절대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도시와의 발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특히 소득 측면에서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것이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는 IMF외환위기 이후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및 생활여건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의 과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가 2,000명도 못 되는 면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서비스업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이는 다시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인구를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업에 기초한 농촌의 소득감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직불제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외에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다채로운 전략들이 종합적으로 모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한국정부에서 국가 어젠더로 채택하고 있는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 오내원 외. 2001.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현, 2005, “농촌정주생활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점”, 「국가균형발전전략」,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공동 워크숍 결과보고서 ②, 경제사회연구회
- Williamson, J.G. 197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Regional Policy.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제기

농업 농촌은 산업적·공간적 측면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농업활동이 지속됨으로써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토양보전 및 수질함양과 같은 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전통문화 유지 등 비시장재화(non-commodity output)를 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생산 활동에 수반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여러 가지 농업·농촌의 역할을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 하며, 이는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기능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은 국가 간의 교역에 의해 획득될 수 없으며, 각 국가에서 농업부문의 생산 활동이 지속됨으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최근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농업이 비경제적이고 비교역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농업보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입국의 대표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비교우위를 기초로 한 완전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 논리인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농업부문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 및 이론적 기초에 관해서는 그 동안 OECD,

FA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은 물론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거로 결합생산 측면,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시장실패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의 특성 등으로 시장기구에만 맡겨둘 경우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고,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을 위해 우선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이론 검토를 위해 결합 생산성 측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원칙을 검토해 보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과 논의동향

2.1.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특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식량공급의 본원적 기능 이외의 다양한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농업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단순히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생태계와 토지 공간 보전 등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와 전통문화 등 지역사회 유지·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통해 타 산업분야와 달리 농촌지역의 어메니티(amenity)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그림 1>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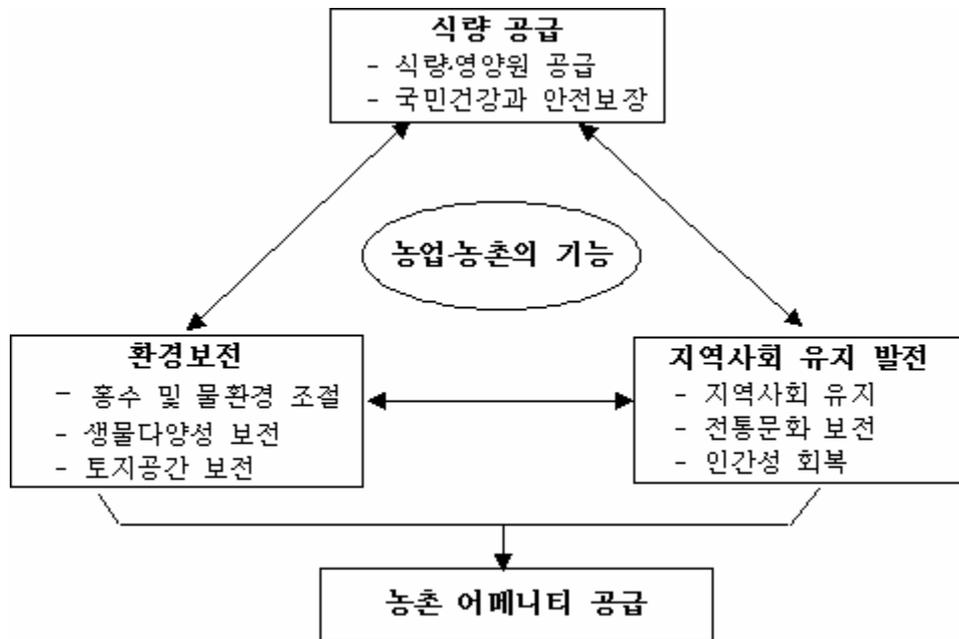
농업은 논농사를 통해 물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홍수조절, 토사붕괴 및 토양침식 방지,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의 다양한 역할과 수질정화와 대기조절 및 유기성 폐기물 분해 등을 통해 환경부하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농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공간과 농업경관 제공 등 인위적 자연 형성 및 보전 역할도 담당한다.

이 밖에도 농업은 생산 공간과 생활공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 형성 및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고 도시민의 긴장·완화시키는 보건 휴양 기능, 자연체험 학습 등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무역자유화 완화의 대응논리로 이용되는 핵심적 근거이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농산물 수출국도 수용할 수 있는 개념규정과 관련지표 도출 및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합의점 도출에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1. 농업·농촌이 역할과 기능



2.2. 다원적 기능의 논의 동향

농업부문의 다원적 기능에 관해서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1994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OECD에서는 1997년부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1998년 OECD 농업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 수용 여부 및 그 적용방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보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가 농정의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결국 수입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농업생산 활동은 식량을 공급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경관유지, 토양 보전,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혜택을 제공하고, 많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에 기여한다는 점이 각료선언문에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원국들이 농업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공동목표 중 하나로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통해 농촌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OECD사무국의 작업지침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2001년 7월에 개최된 OECD 다원적 기능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17개국의 국별 보고서를 토대로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홍수방지와 수자원 함양 등의 국토보전과 경관형성,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 활성화, 식량안보 등 각각의 내용별로 결합성과 외부경제성, 공공재적 성격 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은 다원적 기능의 내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에 관한 실증적 검토에 불과하며, 다음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의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 활동에 의해 농산물 이외의 유무형의 비시장적 산출물로 이들 가치는 지형과 기후, 역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특히 OECD는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속에서 필연적으로 공동 생산되는 것으로 농업생산과 불가분의 관계(결합성)에 있으며, 농산물 가격형성에 반영되기 곤란하고(외부경제), 누구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공공재).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3.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이론 검토

3.1. 결합생산 측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 생산 활동과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결합생산은 한 가지 이상의 여러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합생산의 요인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적 상호의존성, 공공 투입재 또는 분할 불가능한 투입물의 존재, 배분이 가능하나 고정된 투입물의 존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OECD, 2001).

첫째, 기술적 상호의존성은 투입재의 변화 없이 어느 산출물의 공급 증감이 다른 산출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래 농업 생산과정은 기술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면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논농사에 의한 홍수조절과 수질정화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술적 상호의존성에 의한 결합생산의 경우 복합 산출물(multiple output)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업생산물과 결합생산물과의 보완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결합생산의 요인으로 분리 불가능한 투입물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벼 생산으로 들녘의 푸르름과 수확기의 황금물결 등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제공하는 경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을 분리할 수 없다.

표 1. 농업부문 다원적 기능과 결합생산성과의 관계

	기술적 상호의존성	공공투입재/ 분리 불가능 투입물	배분 가능한 고정 투입물	농산물과의 PPF 형태
식량안보 기능	+++	+	++	보완 및 경합
환경보전적 기능	+++	+	++	보완 및 경합
농촌경관 제공	++	+++	+	보완
농촌의 활력 유지	+++	+	++	보완 및 경합

주: +++ 매우 강함, ++ 보통, + 약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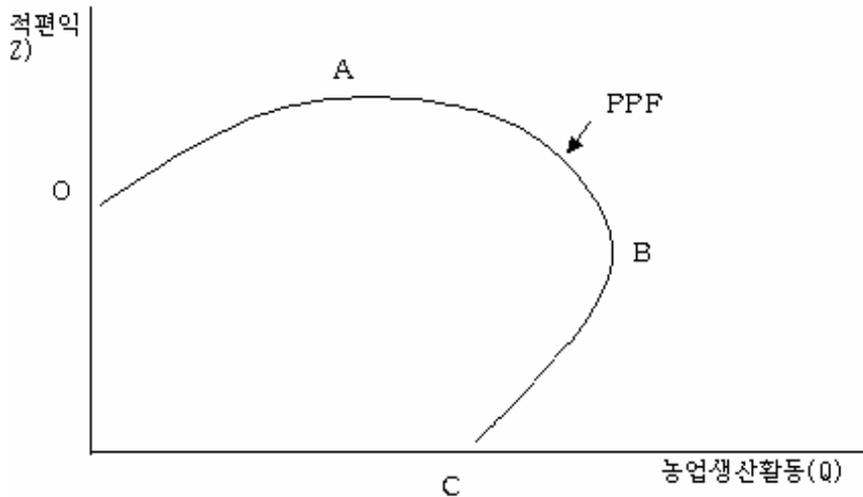
자료: 권오상, 김기철(2000), p.54.

셋째, 결합생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리되는 가능하나 고정된 투입물로 인해 결합생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작규모와 자가 노동력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확대가 가능하나 단기적으로는 고정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농가가 생산하는 서로 다른 생산물은 기술적으로는 상호 독립적이나 고정투입물(토지와 노동력 등)로 인해 산출물에 영향을 받게 된다.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적 편익 증가시키는 다원적 기능과의 결합생산 관계는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 가능경계(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PPF의 OA구간은 농업생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가 증가되는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농업생산과정에서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제고 등의 다원적 기능은 보완관계 영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 AB구간은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증가시킴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줄어들게 된다.

결합생산과 관련 복수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의 생산비가 산출물을 별도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경우 범위의 경제성(economies of scope)이 존재한다고 한다. 범위의 경제성 개념은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생산 활동에 있어서 투입요소가격 벡터를 w , 농산물 생산량을 Y_a ,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벡터를 Y_m 이라 하자. 만약 농산물 공급과 다원적 기

그림 2.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결합생산 관계



능 제공에 있어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설사 타 산업부문의 활동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업생산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비효율적이 방법이 된다. 이 경우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위 식에서 역으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경우, 즉 범위의 비경제성이 존재하는 경우 농업생산보다는 시장개방과 비교우위효과의 극대화, 전문적인 환경관리 프로그램, 농촌의 공업화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실증분석(권오상, 김기철, 노재선, 2004)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지 아니면 농업생산과 분리된 다원적 기능 공급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은 농업활동의 다원적 기능 공급에 있어서 범위의 경제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농산물 생산은 국내 생산을 통하지 않은 다른 어떤 다원적 기능의 공급보다도 더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부문 다원적 기능의 결합생산 특성과 관련 농산물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반드시 농업생산 활동과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 간에 결합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결합정도는 다원적 기능 간에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계가 완화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식량안보, 지역개발 등 다원적 기능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만은 아니며 오히려 식량안보를 강조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은 결합생산 특성이야 말로 다원적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과의 불가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2.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결과가 시장의 외부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의 외부를 통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한 가격지불이나 비용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면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하고, 효용을 감소시키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가 발생한다고 한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인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비용(편익)과 개인의 입장에서 계산된 사적비용(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된다.

농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다원적 기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반국민들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논 농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홍수조절의 경우 정부개입 없이는 그 가치가 쌀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며, 홍수조절 기능 자체가 거래되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쌀 생산의 경우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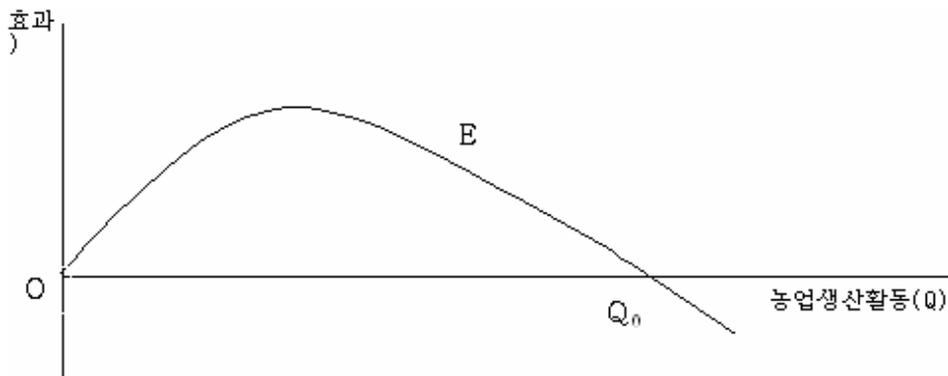
농업생산량과 외부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축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 세로축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원적 기능인 외부효과 크기로 설정한다. 곡선 E는 농산물 생산량과 외부효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Q_0 수준 이하의 농산물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그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실제로 농업생산 활동과 외부효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E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각국의 농업생산은 Q_0 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의 진전으로 국내 농업생산 활동이 감축됨에 따라 다원적 기능을 나타내는 외부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한 관심대상이다.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Q_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그 산출물인 비시장재화의 경우 공급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메카니즘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즉, 생산자는 일종의 왜곡된 가격신호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급되는 다원적 기능이나 농산물 생산량 역시 사회적 최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3. 농업활동과 다원적 기능인 외부효과와의 관계



3.3. 공공재적 특성

공공재는 통상적인 사적재와는 달리 어떤 사람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일단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공공재에 대해 가지는 수요를 나타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 수요 및 공급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있어서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정도에 따라 공공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배제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순수공공재적 특성의 다원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배제는 가능하나 경합성이 완전하지 않은 클럽재나 공유재산적 성격의 다원적 기능도 존재한다. 순수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로 농업경관, 자연서식지, 생물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사적재가 아닌 대부분의 재화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이다. 지역공공재는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편익이 제공되는 재화로 홍수조절, 토양보전, 문화적 가치, 경관 등을 들 수 있다. 개방자원은 혼잡성과 경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자원의 과잉소비, 즉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일으키기도 한다. 개방자원의 예로는 식량안보, 방문자의 경관 등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자원인 공유자원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만 개방적인 특성을 가진다.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며 혼잡하다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공재와 연계시켜 분석하는 경우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다. 농업경관의 경우 사용가치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경합성이 발생하고 배제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성립 여하에 따라 개방자원 또는 사적재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경관을 비사용가치 측면에서 보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모두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공공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표 2.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공공재의 구분과 다원적 기능

구분		(저)경합성 (고)		
		비경합적 (non-rival)	혼잡발생가능 (congestible)	경합적 (rival)
(저) 배 제 성	배제 불가능 (non-excludable)	순수공공재 (pure public goods) - 경관(비사용가치) - 자연서식지 - 생물다양성	개방자원 - 식량안보 - 경관(방문자 사용 가치)	개방자원
	(편익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경우)	지역공공재 (local public goods) - 홍수조절 - 토양보전 - 토사유출방지 - 경관(지역주민 사용 가치) - 문화적 유산	-	-
	(커뮤니티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제가 가능한 경우)	-	공유자원 - 지하수 함양 - 자연서식지 - 생물다양성	공유자원 -환경
	배제 가능 (excludable)	준공공재 -자연서식지(비사용가 치) - 생물다양성	클럽재 (club goods) - 식량안보 - 자연서식지 - 생물다양성	사적재 (private goods) -경관(사용가치) - 문화유산 - 식량안보

자료: OECD(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공하는 농촌경관 및 문화적 가치 등의 경우 농민이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 등을 운영하여 상품화할 경우 배제 가능하고 경합

성을 지니는 사적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민이 여행 중에 감상하는 농촌경관의 가치 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농촌경관의 가치는 상품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시장기능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농촌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보전 기능이나 농촌 전통문화 유지 기능 등은 순수 공공재에 가까운 기능이다. 농업이 함양한 수자원이나 농업으로 인한 홍수조절 기능 등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며, 이들이 수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또한 농촌을 발전시켜 지역의 고용증대와 도시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 역시 일종의 공공재적 기능이다. 물론 어떤 지역의 농업은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차적으로 기여하게 됨으로써 수혜대상자자 지역에 한정된 지역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농업전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도시화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완화하는 파급효과를 가짐으로 순수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의 기능의 공공재적 성격에 관해서는 농산물 가격에 식량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적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로 농지를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식량안보 기능을 제공함은 식량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 식량공급에 따른 편익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다원적 기능의 내부화를 위한 원칙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공에 따른 사회적 가치가 관련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공급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긍정적 외부효과가 시장기능을 통해 내부화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업환경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공급비용이나 가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외부효과와 다른 생산간의 관계(결합성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원칙들로는 수혜자부담의 원칙, 소비자부담의 원칙, 공급자획득의 원칙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표 3> 참조).

수혜자부담의 원칙(beneficiary-pays principle, BPP)은 편익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생산한 사람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외부효과가 내부화되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보상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수행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다원적 기능으로부터 누가 어느 정도의 편익을 얻는지와 수요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적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소비자부담의 원칙(consumer-pays principle, CPP)은 수혜자가 상품과 결합생산되는 다원적 기능의 소비자일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보다는 공급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때 경제적

표 3. 다원적 기능의 내부화를 위한 원칙

원칙 유형	수혜자 부담의 원칙	소비자 부담의 원칙	공급자 혜택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로부터 지불을 보장받기 위해 적용 • 비이용자 수혜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기능 편익이 상품구매를 통해 현실화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를 파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덜 효과적임 • 비이용자 수혜자들에게 의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법률적 측면	수용 가능함	관련 상품 소비자와 수혜자가 동일하다면 수용 가능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가능성이 적음
국제적 조화의 측면	효과적이나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거래 가능하지 않은 다원적 기능의 경우 덜 효과적임	다원적 기능의 상품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효과적임

자료: OECD(1999), p.26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효율성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공급자에게 외부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그 비용을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특별한 다원적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 라벨링을 통해 높은 상품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외부효과의 수혜자가 언제나 외부효과를 낳는 상품의 소비자인 것은 아니며, 해당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특별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여 추가적인 가격(surcharge)을 지불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제적인 조화의 원칙으로 소비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로부터 사람들이 취하는 이점들은 국가나 지역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다원적 기능을 통해 산출되는 생산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공급자획득의 원칙(provider-gets principle)은 공급자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의 한 부분을 이룬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만이 지불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공급자획득의 원칙보다 더욱 엄밀하며 이론적으로 최적수준의 공급을 유도한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비이용 가치를 지닌 다원적 기능의 경우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경우 확인 가능한 다원적 기능 이용자들만이 비용을 지불하고 비이용 가치를 향유하는 수혜자는 무임승차자로 남겨질 위험이 있다.

다원적 기능의 공급자들에 대한 지불은 가능한 한 많이 다원적 기능 이용자와 비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얻는 각각의 편익에 비례하여 치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다원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도 적용되어야 한다.

5. 결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접근은 크게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다원

적 기능이 얼마만큼 공급되는지에 대한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며, 외부경제와 공공재의 특성은 다원적 기능의 편익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는 분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적 기초이다. 외부성과 공공재적 측면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이들 두 요인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결합생산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정확하게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급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면 결합생산성과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해지고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시장에 개입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다. 생산자는 시장 신호를 참조하여 적절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기만 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을 이루기 때문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내부화하는 원칙으로 수혜자부담 원칙, 소비자부담 원칙, 공급자획득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수혜자부담의 원칙이다. 만일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들이 생산과 연계된 상품들을 소비한다면 그들은 상품에 부가되는 추가 요금을 통해 다원적 기능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불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부담 원칙이다. 만일 다원적 기능이 순수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혜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가는 다원적 기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또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공급자 획득의 원칙). 현실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내부화를 위한 적절한 가격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적절히 결합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의 추진은 물론 정부개입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불하거나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지불 제도가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오상, 김기철. 「농업의 다원적 기능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2000.12.
- 권오상, 김기철, 노재선. “설문조사기법을 이용한 다원적 농업의 범위의 경제성 검증.”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2호, 2004. pp.85-110.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1.
- 농림부 국제협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OECD 논의 자료집」. '99-국농11. 1999.
- 서동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농업경영연구」 제1집 (2003), pp.107-120.
- 오세익, 김수석, 강창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농림부. 2001.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서 R4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이상영, 신용광, 김영.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이용기. “WTO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성.” 「농업경제연구」 제44권 제4호, 2003. pp.199-219.
- 이재욱. “농업의 다원적기능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 「농촌경제」 제22권 제2호. 1999. pp.39-51.
- Boisvert, Richard N. *Joint Production Aspects of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Consultant's Report*. AGR/CA/APM(2000)6, OECD. 2000.
- OECD.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1999.
- OECD.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2001.
- OECD. *Multifunctionality: The Policy Implications*. 2003.

부 록 3

제3회 FANEA 기관장 회의 합의문: Draft Agreement at DG/President Meeting (05/10/25)

1. Joint Research Programs

- They agreed to account every joint activity even on an individual basis among researchers of three institutes within the framework of FANEA.
- They agreed to establish a close linkage between researchers of three institutes to study common issues, such as food safety and agri-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list of researcher's name with research field,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will be sent each other in the first stage.

Some results of these joint research programs may be reported at the next FNEA symposium.

2. Exchange of Researchers

- They agreed that Mr. Uebayashi will be invited by KREI and IAE to give a lecture on AGLINK which could be a new joint research programs

3. The 4th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 They agreed that the 4th symposium will be held in Seoul preferably in the week beginning the 4th of September next year, although the second option is the next week beginning the 11th. The Full-Moon holiday seasons shall be avoided.

4. Global Club of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s and Agencies (AERIAS)

- Dr. Choi and Dr. Qin are pleased to join the Global Club of AERIAS. Dr. Nishio will inform their intention to Dr. Susan Offutt, director general of

ERS-USDA and the president of the Club. Dr. Choi will send e-mail to her as he knows her.

5. Others

- They agreed to try to expand the horizon of our Symposium; for example, invite other related institute or university in each country as an observer or guest.

부 록 4

초청세미나(1, 2회) 사진자료 및 발표자료

- 초청세미나 사진자료

가. 제1회 초청세미나



나. 제2회 초청세미나



- 초청세미나 발표자료

가. 제1회 초청세미나: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나. 제2회 초청세미나: 중국의 농산물 국제교역과 경쟁력

<2005년 제1회 FANEA 초청세미나>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경제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5. 1. 19(수)

목 차

1. 머리말: 미·중 관계와 한반도
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4. 평가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한광수 교수

(kshan@incheon.ac.kr)

1. 머리말: 미·중 관계와 한반도

중국의 부상과 때를 같이 하여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 에너지의 분출이 거세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계와 북한문제가 걸려있고, 내부적으로도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혼란 속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의 저변에 중국의 변화가 맞물려 있음이 인지된다.

냉전체제 와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과 수교하였다. 물론 수교 이전에도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¹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구조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이지만, 19세기말부터는 여기에 서방세력과 일본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는 상황논리가 크게 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더 분명하게 달라졌다. 미국이 등장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중국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던 1944년 미국정부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미·중 관계의 연원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국·공 연합정부에 대한 협상을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까지 지속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잠시 미국의 주도로 좌우합작이 추진되었다.² 알려진 바와 같이, 좌우합작의 실패는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그 추진세력이 암살되어 몰락하고 남북한은 각기 서둘러 분단을 재촉하였다. 1949년 연합정부 수립에 관한 미국정부와 중국공산당의 협상 실패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애치슨라인을 연결 고리로 하여 곧바로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졌다.³

¹ 한광수,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참조.

² the Department of State ed.,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 Based on the file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49 참조.

³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과 분단 고착화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실패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 미·중 양국은 새로운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대영제국을 대신하여 이제 막 세계무대를 장악하며 떠오르는 신흥 서방세력이었으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은 제국주의 외세를 등에 업은 봉건세력인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떠오르는 신흥 동방세력이었다. 20세기 중반 한반도는 이들 떠오르는 양대 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일본의 피식민 상태를 벗어나는데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미·중 화해는 월남전이 종전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에 찾아 들어온 또 다른 변화의 서곡이었다. 양국은 1972년 역사적으로 화해한 데 이어 1979년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2차대전 이래 분단으로 냉전체제를 대변하던 한반도는 양국 관계의 변화에 당황하였다. 분단된 남북한 정권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미·중화해 직후 남북한은 비밀회담을 통하여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성명은 민족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한 권력자들은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어서 1979년 미·중 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49년 국·공 연합정부론 협상이 좌절된 이후 30년만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오랜 악연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계획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으며,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발전 잠재력에 편승하여 ‘아시아 특급’을 잡으려는 전략을 현실화한 것이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환하는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역사적 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한국에 전달되고, 동시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라 안의 사정은 혼란스러웠다. 정부는 주한 미군철수에는 ‘자주국방’으로, 끊이지 않는 민주화 사회운동에는 아홉 차례의 ‘긴급조치’로 대응하였다. 결국 절대권력은 미중관계가 정상화된 지 9개월 여 후에 정변을 맞고 군부세력은 ‘피의 대가’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러한 동안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1970년대 시기를 우리 사

회는 이처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지냈다. 이제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중국과 미국 양국이 화해하고 관계를 발전시켜온 지도 30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미·중 관계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정치경제지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중국의 존재와 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미·중 시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한반도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향의 초기 단계다. 이 글은 오늘날 중국의 부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 분석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먼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중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경제의 침체 속에서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수출주도형 공업 발전을 추진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그동안 미국과 손잡은 일본이 주도해왔다. 이러한 협력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가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위기는 일본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동남아 국가들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2.1. 동아시아 무역구조의 변화와 중국의 고도성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장경제를 착수한 1990년대부터다.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여 산업생산력이 향상되고 교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무역은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규모를 보면, 1998년 1,83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4,385억 달러로 연평균 19.0%씩 증가하였다. 수입은 더욱 빨리 증가한다. 수입규모는 1998년 1,402억 달러에서 2003년 4,131억 달러로 연평균 24.1%씩 증가하여 세계 수입국 순위에서 일본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이런 추세는 수입의존도 증가로 나타나, 1997년 15.9%에서 2002년에는 31.1%로 올랐다.

중국은 이처럼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의 총수입 증가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수입은 1,877억 달러가 증가하여 세계총수입 증가에 17.7%의 기여율을 보인데 반하여, 미국과 일본은 같은 기간에 4.4%, 0.05%의 기여율을 보였을 뿐이다.

눈을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돌려,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무역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이며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43.5% 증가한 572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의 총 수출 중에서 12.2%를 차지하였다(1995년에는 5.0%). 이에 따라 일본의 총 수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기여도는 32.1%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이 전자, 기계, 수송기기 등 중국의 공업화와 긴밀하게 연관된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1998-2003)

	단 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규모	10억 달러	946	991	1,080	1,159	1,237	1,406
실질성장률	%	7.8	7.1	8.0	7.3	8.0	9.1
일인당GDP	달러	762	787	853	908	963	1,005
외환보유고	억 달러	1,450	1,547	1,656	2,122	2,864	4,033
수출	"	1,837	1,949	2,492	2,662	3,256	4,385
수입	"	1,402	1,657	2,251	2,436	2,952	4,131
무역수지	"	435	292	241	225	304	254

자료: 1998-2002는 중국 통계연감, 2003은 ADB 등 참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0년대 중반 30%에 가까웠으며 1999년에는 30.7%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3년에는 24.6%를 보였다. 이는 일본 시장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토대로 점차 동아시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래 일본은 한국 등 NIES 지역이나 동남아에 대해서도 수출이 순조로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일본 수출의 전반적인 추세가 미국 중심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근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2>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은 2003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에게 중국은 제 1의 수출시장이 되어, 중국의 공업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 동향(1995-2003)

단위: 억 달러, %

	총수출			대중국 수출			총수출증가율		대중국수출증가율	
	1995	2000	2003	1995	2000	2003	1995-2000	2000-2003	1995-2000	2000-2003
한 국	1,313	1,718	1,957	91(7.0)	185(10.7)	392(20.0)	5.5	4.4	15.1	28.6
대 만	1,117	1,483	1,442	205(18.4)	261(17.6)	354(24.5)	5.8	-0.9	7.9	10.6
홍 콩	1,736	2,020	2,238	579(33.3)	697(34.4)	955(42.7)	3.1	3.5	3.8	11.0
싱가포르	1,182	1,379	1,441	28(2.3)	54(3.9)	101(7.0)	3.1	1.5	24.9	23.5
말레이시아	737	982	1,207	19(2.6)	30(3.1)	127(10.5)	5.9	7.1	17.0	61.3
태 국	572	690	806	16(2.9)	28(4.1)	57(7.1)	3.8	5.3	19.6	26.7
인도네시아	454	621	724	17(3.8)	28(4.5)	52(7.2)	6.5	5.2	16.7	23.6
필리핀	174	382	432	2(1.2)	7(1.7)	51(11.9)	17.1	4.2	46.9	97.7

자료: IMF, KOTIS, 대만 경제부 참조.

근래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95년 7.0%, 2000년 10.7%, 그리고 2003년에는 20%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대외수출 연평균 증가율이 1990년대 후반 5.5%, 그리고 2000~2003년에 4.5% 증가한데 비하여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1%와 28.6%를 기록하였다.

홍콩이나 대만의 대중국 시장 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홍콩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955억 달러, 비중은 42.7%이며, 대만의 경우 354억 달러로 24.5%에 달한다.⁴ 대만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259억 달러로 1990년의 348억 달러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에 대한 수출도 1990년 166억 달러에서 2003년 119억 달러로 감소했다. 실제 2000~2003년 기간 중 대만의 총 대외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10.6%가 증가하였다.

동남아 지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중 가장 높은 필리핀의 경우 2003년에 11.9%이고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10.5% 정도이다. 필리핀은 1995년 중국에 대한 수출이 2억 달러에 그쳤으나, 90년대 후반 연평균 증가율 46.9%, 그리고 2000~2003년 기간 중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주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 증대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활력이 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를 놓고 중국이 동아시아 상품을 수입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자. 일본은 총 대외수출이 13.0% 증가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2.7% 감소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43.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증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1.5%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45.2%, 대만 43.4%, 그리고 홍콩은 70.8%로 이들 3개 지역은 대중국 시장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이보다 낮아 20% 수준이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높은 편이다. 필리핀은 중국의 총 수출증가 기여율이 47.1%, 말레이시아는 27.5%에 달한다.

다음, 중국의 경제성장이 무역을 통하여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역특화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⁵ 이 지수(HS 2 단위 기

⁴ 대만은 중국에 대한 직교역은 허가되지 않아 홍콩을 경유한 간접 수출이다.

준)를 이용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비교우위구조를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박 변순 박사가 조사한 것을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이 표는 한국이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 특화하고 있는 산업을 보여준다. 2003년 현재 수출 특화 산업을 보면, 화학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 펄프 및 종이, 기계 및 전자, 정밀과학기기 등 공산품 위주이다. 수입 특화 산업은 농산물, 목재 및 목제품, 석재, 귀금속 등 1차 상품이 많다. 최근 5년 간(1998~2003) 비교우위가 변한 산업은 섬유, 신발, 석재 및 시멘트, 수송기기, 잡제품 등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의 변화는 일본과 대만도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일본은 석유 정제품 등 광물제품과 가죽제품이 수입 특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은 화학, 플라스틱, 섬유, 기계 전자, 가죽제품 등의 수출 특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구조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출특화산업 으로는 동식물성 기름, 목재 및 목제품, 광물제품, 펄프 및 종이, 화학제품 등 자원 및 자원 가공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일차 상품의 수출 급증이 현저하다. 2003년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수출 11억 달러(64% 증가), 태국은 고무 수출 8억 달러(69% 증가), 그리고 필리핀은 구리 수출 2억 달러(89% 증가)가 주목을 받았다. 기계 및 전자 부문은 수출 특화가 서서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특화산업은 섬유 및 의류, 신발, 잡제품 등 노동집약산업이 많아 주목되는 점이다.

⁵ 무역특화지수는 한 국가가 다른 교역상대국가와의 교역에서 어떤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가를 확인할 때 이용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수출-수입)를 총 교역규모(수출+수입)로 나눈 것이다.

표 3. 동아시아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변화(1998-2003)

	한 국		일 본		대 만		아세안 6국	
	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산 동물	-0.61	-0.86	-0.87	-0.83	-0.66	-0.35	-0.19	-0.24
채소	-0.96	-0.95	-0.97	-0.97	-0.59	-0.64	-0.52	-0.34
동식물성 기름	0	-0.58	-0.82	-0.27	-0.40	0.09	0.92	-0.98
가공 식품	-0.58	-0.76	-0.91	-0.94	-0.07	-0.51	-0.68	-0.60
광물 제품	0.13	0.12	-0.71	-0.63	-0.57	-0.23	0.55	0.36
화학 제품	0.49	0.54	0.26	0.46	0.54	0.66	-0.19	0.15
플라스틱	0.95	0.88	0.65	0.59	0.94	0.93	0.73	0.76
가죽, 가죽제품	0.79	0.32	-0.80	-0.84	0.77	0.69	-0.06	-0.29
목재, 목제품	-0.23	-0.80	-0.98	-0.96	-0.25	-0.52	0.93	0.89
펄프 및 종이	0.97	0.76	0.58	0.43	0.83	0.66	0.80	0.70
섬유 및 의류	0.32	-0.15	-0.52	-0.61	0.86	0.75	-0.44	-0.66
신발	0.08	-0.35	-0.94	-0.95	0.14	-0.18	-0.88	-0.83
석재, 시멘트	0.50	-0.35	-0.34	-0.10	0.59	0.65	-0.24	-0.33
귀금속	-0.13	-0.28	-0.09	0.15	0.14	-0.08	-0.6	-0.42
1차금속, 그제품	0.46	0.35	0.45	0.45	0.56	0.73	-0.42	-0.12
기계 및 전자	0.39	0.52	0.39	0.34	0.61	0.69	0.12	0.32
수송기기	-0.73	0.40	0.36	0.50	-0.15	0.29	-0.84	-0.77
과학정밀기기	0.28	0.80	0.18	0.49	0.58	0.83	-0.13	0.10
잡제품	0.05	-0.40	-0.73	-0.70	-0.12	-0.04	-0.76	-0.83

자료: 박번순,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4. 9

2.2. 동아시아의 대중국 직접투자와 산업 협력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직접투자자본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도 중국에 대한 투자 진출의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당초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제3국에 대한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이에 더하여 중국 국내 시장 진출도 점차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투자기업들 중에서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기업은 중간재나 부품을 국내의 모기업에서 조달하는 성향이 강하고, 따라서 이들 기업의 무역은 기업 내 무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동아시아 지역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이런 형태를 기초로 한 수직적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부품이나 중간재 분야의 대중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총 수입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수입은 지난 2003년 56.1%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1996년의 54.5%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외자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6년 40.7%로부터 2003년에 54.8%로 급증하였다.⁶ 이는 외자기업이 조립생산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품 및 중간재 생산을 위한 외자 투자가 증가하여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구 소비재 및 산업용 소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내 수요 증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자동차 분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앞 다투어 중국 투자를 늘려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투자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중간재가 모기업이나 해외 조달로부터 점차 중국내 생산으로 전환중이며, 동시에 이러한 조립제품은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셋째로, 중국투자 네트워크가 광범위하여 동아시아 역내 발전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 진행된 상태에서 착수되었으며 중국 시장 자체가 넓은 데 기인한다. 종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던 수직적인 기술이전 방식과는 사뭇 다른 다각적이고 생동적인 산업을 창출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의 생산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발전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촉발할

⁶ 중국 상무부 통계 참조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 현재 진행중인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밝게 보는 입장은 종래 일본의 동아시아 투자 행태가 수직적 분업에 의하여 대일본 무역적자를 고착시킨 것과는 달리, 중국투자는 수평적 산업분업과 다른 국가들의 동시 발전을 통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⁸

2.3. 동아시아 경제의 과제

오늘날 세계가 동아시아경제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EU나 NAFTA 등과 같은 경제협력체의 제도적 틀이 없이도 이들 경제협력체를 훨씬 능가하는 역내 협력의 활력을 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지향하며 발전하는데 있다. 그만큼 역내 보완구조를 통한 응집력과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구조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력 이외에 자본력을 꼽을 수 있다.⁹ 이를 대신하여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중국 시장이 주목받는 배경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기업으로부터 환영받기 마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되는 중에서도 역내 경제권이 강조되는 지역화 추세도 이런 맥락이다.

⁷ World Bank, East Asia Update: Strong Fundamentals to the Fore, April 2004, p23

⁸ Zhang Yunling, "China's Economic Emergence and Its Impact", KIEP, 2004

⁹ 그러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대출은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일본금융기관의 동아시아에 각국에 대한 대출규모는 한국 121억 달러(차입 총액 1,041억 달러의 11.6%), 중국 116억 달러(641억 달러의 18.1%), 대만 40억 달러(10% 이하), 말레이시아 50억 달러(10% 이하), 인도네시아 57억 달러(346억 달러의 16.5%), 가장 많은 태국이 88억 달러(391억 달러의 22.5%) 등이다.

표 4.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 추이 비교

단위: 억 달러, %

		1998	2000	2002	2003	증가율 (98-03)
중국	총수입(A)	1,404	2,247	2,954	4,128	24.1
	동아시아	790	1,080	1,606	2,231	23.1
	동아시아(일본제외) (B)	507	679	1,071	1,490	24.1
	비중(B/A)	36.1	30.2	36.3	36.1	
일본	총수입(A)	2,808	3,811	3,368	3,815	6.3
	동아시아	976	1,508	1,394	1,618	10.6
	동아시아(중국제외) (B)	607	955	777	866	7.4
	비중(B/A)	21.6	25.1	23.1	25.3	

주: 동아시아 범위는 한, 중, 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10개 지역

자료: 세계무역 통계, 일본 JETRO, 대만 재정부 통계

무역으로 본 중국의 시장 크기는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규모도 중국의 수입이 일본의 수입에 비하여 6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표 4> 참조).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의 수입에서 상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 8개국의 수입을 비교해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치고 최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계속 확대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벌여 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적 잠재력이다. 중국은 인구가 일본보다 10배 많으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 7.9%인데 비하여 일본은 1.1%에 그쳤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당장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당분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2003년의 경우 일본의 일인당 소득 수준은 3만 달러를 초과하여 1천 달러에 그친 중국에 비하여 30배에 달한다. 일본의 총 수입규모는 4,000억 달러에 가까워 일본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생산성 정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무역과 투자를 저하시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 산업성이 1999년을 시점으로 추정된 바에 의하면, 중국의 일인당 실질 소득이 일본과 같아지는 시점은 2040년으로 예상되었다.¹⁰ 그만큼 일본경제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중국과 일본도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에서 협력과 경쟁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아세안과 FTA 추진을 두고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일본 또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¹¹ 양국이 아세안을 두고 경쟁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FTA 체결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도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중·일 3국간에도 FTA 추진이 거론되어 왔으나, 일본이 한국과의 추진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중요하며, 일본은 중국의 시장이 필요하다. 일본이 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일본 기업들은 FTA 대상국가로 중국(43.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3.9%)이나 아세안(8.9%)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¹² 응답 기업 중 현지에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중국이 68.1%이고 아세안은 56.4%이었다. 이는 실제 운영 거점과 관계없이 중국에 거는 사업의 기대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¹⁰ 중국이 일본을 추격하는 것은 계산 시점마다 다르게 나왔다. 198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영원히 추격할 수 없는 상대였고, 1990년에는 2096년으로 나왔다. 중국의 추격 가능 시간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¹¹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FTA 기본협정을 맺고 2004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세안과는 별도로 개별국가와의 FTA도 추진 중인데 중국은 태국과 2003년부터 농산물 조기자유화에 합의하였다.

¹² 일본의 무역투자진흥회(JETRO)가 일본기업 2,538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876개사가 응답한 결과이다.

이처럼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현상은 1997년에 촉발된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이 지역 경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중국 시장이 보여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2001년 11월 WTO 가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과의 산업 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분업을 종래 일본과 동아시아의 분업과 비교하여 보다 수평적이라는 점을 들어 역내 경제구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역할은 다소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력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상당기간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과 일본이 협력과 경쟁 속에 아시아 경제의 두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권은 ‘아세안+3’를 토대로 동북아와 동남아가 연계하여 세계적인 지역경제 협력체가 태동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발전은 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주요 경쟁 상대국으로 떠오른 한국과 한반도가 이러한 중국경제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변화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¹³

오늘날 한·중 양국은 수교 12년의 짧은 교류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의 개

¹³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volving of World Order*, Georges Borchardt. N.Y., 1996. 참조.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월남과 함께 중국문명권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혁·개방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한 차제에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 안보를 비롯하여 거의 전면적이다. 이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 한국과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영향을 크게 세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중국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우리 사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기회를 활용하려는 차분한 의욕보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무역, 투자,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급상승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추월하였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급증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른 영향이다. 중국을 21세기 최대 경쟁 상대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은 대중국전략을 세계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의 양날의 칼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중국과 연계된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도 증권시장 및 직접투자 참여 등 자본 진출에 적극적이다. 한국에도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IMF관리체제 이후 이처럼 미국 등 서방 자본의 진출이 뚜렷해졌다. 그들은 한국에 붙고 있는 중국경제 붐에 편승하는 한편, 급속하게 중국경제에 흡수되어 가는 한국 시장을 신자유주의 경제에 편입시켜 이들 시장에서 그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의 변화를 통한 영향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변화를 외면해 오던 폐쇄체제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대립에서 남북화해로의 전환이 진행중인 것이다. 중국의 체제개혁 모델을 이어받으려는 북한이 당장은 '북핵 문제'로 미국과 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하여 미·중간에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3.1. 중국경제의 직접적 영향

중국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는 경제 협력이다. 정치, 안보 등 경제 외적인 분야에 대한 영향도 경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무역, 투자, 금융 등 경제 협력 면에서 지난 12년 간 중국과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관계를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협력 증가로 사업기회 확대>

수교이래 본격화한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12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여준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경제협력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교역 면에서 미·일 등 여타 지역에 비하여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표 5>참조). 이에 따라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두 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2004년에는 최대교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교역 급증이 양국 간에 사업기회의 급증과 경제협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은 물론이다.

수교 후 10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에 한국의 전체 수출은 연평균 약 7.8%의 증가율을 보여 대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3배를 초과하였다.¹⁴ 수입에 있어서도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6.2%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무역의존도 증가>

둘째,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3년 70%에 달하였으며, 그중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3년 18.1%를 기록하였다. 대중국 무역이 더욱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

¹⁴ 수출과 수입이 대체로 연간 30~40% 증가해왔다. 다만, 1998년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1년 미국경제 침체 및 IT붐 붕괴의 영향을 받아 저조하였다.

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이미 지난해 대미국 수출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한중교역 규모가 2007년에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역이 증가하면서 교역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대중수출입이 우리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전인 1992년에는 3.5~4.6%에 불과했었다.

<무역흑자 1위이자, 반덤핑 피소 1위 국가>

셋째, 양국 간 무역마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¹⁵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위 수입 규제 대상국으로 2004년 5월 현재 19건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덤핑 규제의 표적이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비관세장벽 등을 크게 활용하는데 기인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대만·홍콩 거래가 중국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 사실상 한국이 무역적자 1위 국가인 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반덤핑 제소 품목을 보더라도,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인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철강, 제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탁세령 2004 참조).

향후 한중교역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무역마찰은 우리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¹⁵ 무역마찰에 관하여는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한국수출입은행), 2004. 7.의 IV장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마찰 참조

가. 한국 관세청 자료

표 5. 최근 한·중 교역 추이(2000~2004. 8)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8
총 액	314.1(43.2)	314.9(0.2)	411.5(30.6)	570.2(38.6)	504.9(45.4)
대중수출	186.1(37.6)	181.9(-1.4)	237.5(30.6)	351.1(47.8)	321.5(53.0)
대중수입	128.0(62.4)	133.0(3.9)	174.0(30.8)	219.1(25.9)	183.4(34.3)
무역수지	58.1	48.9	63.5	132.0	138.1

나. 중국 해관 자료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8
총 액	345.0(37.8)	359.1(4.1)	440.7(22.8)	632.3(43.5)	564.8(48.6)
대한수출	112.9(44.6)	125.2(10.9)	155.0(23.8)	201.0(29.7)	167.2(39.9)
대한수입	232.3(34.7)	233.9(0.8)	285.7(22.2)	431.3(50.0)	397.6(52.9)
무역수지	-119	-108.7	-130.7	-230.3	-230.4

<직접투자 봄>

넷째, 교역과 함께 투자 또한 수교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4년 5월 현재 신고기준으로는 11,737건, 152.4억 달러이며, 실행기준으로는 9,912건, 88.8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은 2002년이래 건수와 액수 기준 모두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평균 투자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1992년 말 현재 건당 83만 달러로부터 2004년 5월 현재 129.8만 달러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 건수의 80%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섬유 등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위주에서 투자 개방 및 내수 시장 활성화로 가전, 통신, 기계, 자동차, 유통, 금융 등 내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 분포를 보면, 2004년 5월 현재(누계, 실제투자 기준) 1위가 산둥성으로 25.2억 달러, 2위 강소성 13.1억 달러, 3위 천진, 그리고 북경, 요녕성, 상해 순이다.

그동안 대중국 직접투자에 봄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는 두 차례였다. 그 하나는 중국정부가 1992년 시장경제 도입을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99년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우선 한중수교 이후부터 본격화하여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급성장했다. 해외투자 잔액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0%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외환위기로 급감하였다. 그 후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된 1999년부터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국내 총 해외투자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었던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협력은 무역과 함께 투자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다섯째, 대중국 직접투자 급증에 따라 제조업공동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 가운데 44.1%가 생산거점을 이미 해외로 옮겼으며 이전을 계획 중이라는 업체는 33.8%였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이전 계획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조업 공동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중국시장 접근전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입장은 이렇다.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국내 생산능력 및 고용을 감소시켜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생산성 격차로 인하여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현재 총고용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추세이고, 제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도 해외투자에 못미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이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는 사정이 심각하다.

외국인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여 제조업 이전을 막아야 하며, 이전을 하더라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저변에는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심리적 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해외직접투자 진출 규모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를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초과하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자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우리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1980년대 말 이후 공동화 우려가 처음 제기되었으나 곧 잠잠해졌다. 공동화를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었던 탓이다.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때문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30.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0% 이하인 미국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에서 자본 및 지식집약으로 옮겨가면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9.7%에 그치는 등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구조 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해외직접투자가 근본 원인은 아니다. 노동집약적 사양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고 자본집약적 첨단 정보통신이 이를 대체하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약화되면 해외투자와 무관하게 관련 업계는 위축될 것이다.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때, 공동화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거나 지연하는 소극적이고 자칫 잘못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같은 적극적인 접근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일에 비하여 13~20년 뒤늦게 중국과 수교하게 된 탓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는데 그만큼 불리하고 뒤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이처럼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과 뛰어난 경제구조적 보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점을 감

안할 때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일 전망이다.

3.2. 한·미 경협구조의 변화

미국은 대중국 경제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중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대아시아 및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21세기 세계전략의 핵심을 중국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전략도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에 속박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적 의식구조의 저변에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관계와 그 변화를 감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하는 상황을 미국은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놀라운 국제환경의 변화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미·중 관계의 변화다. 1992년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서 시작된 양국 관계의 급진전은 1999년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합의와 2001년 9.11테러 공조로 가속화하였다.

<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

중국경제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국의 태도 변화다. 미·중수교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02년 봄 '상하이 공동성명'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오늘날 중국은 30년 전 중국과는 매우 다르며, 10년 후에는 또 다른 나라로 바뀌어 있을 것'이며, '점점 커지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미국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는 한 초강대국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미국은 중국과 함께 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주의 독주로 치닫는 부시 정부에 대

하여 같은 공화당의 원로 외교 전문가가 보내는 충고였다.

미·중 화해를 계기로 하여 미국은 중국을 적대시하던 기존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양국 간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분야는 양국간 협력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분야이다. 양국간 교역은 이미 1천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수년간 대부분을 중국 투자 1위국의 지위를 차지해왔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흐름은 오랜 동안 동서양의 상호 접촉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갑작스런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것이다. 키신저의 말처럼 중국의 ‘운명적인’ 경제발전에 미국도 편승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운데, ‘협력과 견제’라는 양날의 카드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파트너로서 중국의 위상을 EU보다 우위에 두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부드러운 자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충격은 그만큼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최근 보여주는 거센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미국이 계속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경제의 충격을 소화하는데 WTO와 미·중 협력관계가 크게 유익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중 시대, IMF의 충격>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하자, ‘중국이 시장경제에 접근해가면서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면서 천안문 사건이래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시장에 합류하는 한편, 홍콩귀속 후 중화경제권의 팽창이 반가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이 와중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하였으며 중국과 달리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IMF에 강제 편입 당한 한국경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경제에 걸맞는 구조조정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자본들은 거의 균등하게 한국의 빛 덩어리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는 6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건국 이래 1997년까지 50년 간 유치한 246억 달러의 2배를 훨씬 넘는 것이다.¹⁶ 강제로 조정을 당했다는 점은 못내 아쉽지만 우리 기업들의 구조가 전보다 좋아지고 나라경제도 나아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¹⁷

미국은 왜 한국경제를 IMF에 강제 편입한 다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많은 한국기업들을 인수했을까. 우선 한국시장을 놓고 보면, 서방 기업들은 그동안 유독 차관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방식을 고집해 온 우수한 한국 기업들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서방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한 방식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적극적으로 자본 참여하는 구조적 틀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직접투자 이외에도 주식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외국인 자본이 차지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에 대한 자본 비중은 50%를 초과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미국 측에서 한·미간 FTA체결을 일본보다 앞서 서두르겠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한중수교 이후 한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중국경제 및 중화권과 가까워지는 한편 미·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수교 이후 IMF 직전까지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외교역 상황을 보자.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보면, 미국과 364억 달러, 일본과 310억 달러로 전체교역 1,584억 달러의 4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

¹⁶ 한겨레, 2003. 2. 4. ‘김대중 대통령 퇴임사’ 중에서.

¹⁷ 우리나라는 해방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당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¹⁸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쉴릭 대표와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은 한·미간 FTA를 일본에 우선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왔다. IMF 직전 해인 1996년 우리나라는 전체교역 2,800억 달러 중 미국이 550억 달러, 일본이 472억 달러로 36.3%로 낮아지고, 중국은 199억 달러로 92년의 4.0%에서 7.1%로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미 2002년 우리나라의 전체교역 3,146억 달러 중 미국은 490억 달러, 일본은 443억 달러로 양국의 비중은 29.6%로 낮아졌으며, 중국은 445억 달러로 그 비중이 14.1%로 상승하였다. 여기에 홍콩 131억 달러와 대만 105억 달러를 합한 중화권의 비중은 21.5%가 된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계기로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 가는 동아시아경제의 주도권에 주목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방은 한중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자본으로 선점하여 동아시아 역내경제권의 활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경제는 이미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이 된 것을 의미한다.

3.3 북한의 변화와 남북화해

중국의 부상은 북한의 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분단된 한반도 내부에서 자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래 반세기 동안 적대적 대치를 지속해온 남북한 관계가 ‘대립에서 화해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남북 화해의 길>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남북한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상봉하여 회담하고, 민족통일을 약속하는 ‘6.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4년여 동안 남북한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6. 15공동선언 이행 운동과 활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이래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강

대국들간의 암묵적 합의라는 족쇄를 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미국이며,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친미적 성향을 지닌 일부 세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으로서도 이러한 변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이해의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현실이다.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6자 회담으로 발전한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개성공단 협력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시베리아 및 사할린 가스 파이프 연결 구상 등이다.

<북핵, 동아시아 발전의 족쇄인가>

국제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는 1990년대 초 미국이 거론하여 북·미간 문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이 문제를 '6자 회담'이라는 틀을 내세워 다자간 문제로 전환하였다. 미국의 시각과는 달리,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은 체제를 보장하고 향후 체제개혁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받침돌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겨냥하고 있다. 지루하고 험난한 협상이 끊어질 듯 명맥을 이어가는 작금이다.

동아시아경제권에서 북핵 문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19세기이래 동아시아 지역은 과거 일본이 서방과 제휴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방 제국주의 세력의 피식민 상태에 빠져 들어갔던 지역이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상흔이 남아 국제적 주목을 받는 지역이 있다. 중국과 대만간에 양안문제와 한반도의 분단문제이다. 서방의 보수세력들은 끊임없이 이들 지역이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축적된 지역'이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와 냉전의 역사를 검은 그림자로 하여 동아시아 분쟁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것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대만문제 갈등이 다소 해소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한반도문제는 '북핵 문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중 경제협력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와 관계없이 진행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고립탈피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북한은 최근의 동아시아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체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과 물류혁명에 기폭제가 될 경제적, 지리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석유가스 개발과 물류협력 등을 놓고 한국, 일본, 러시아와 이해가 걸려 있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불안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도 이들 문제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 지역은 자본과 기술, 인력과 시장의 상호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다.

북핵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하는데 제동을 걸어 동아시아 경제권의 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북핵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북핵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관심이 많은가를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하여 강경파와 온건파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¹⁹

그리고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조짐이 기존의 동아시아 정치 경제적 역학구조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문제는 ‘핵’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인권, 마약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체제 불안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¹⁹ Task Force on U. S. Korea Policy, *Turning Point in Korea - New Dangers and New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2003. 2. 22. 이 보고서는 쉘리그 헤리슨, 부르스 커밍스, 도널드 그레그, 로버트 갈루치 등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28명이 작성한 것으로 북미간 ‘3단계의 양자간 협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정책의 혼선을 내세워 이 지역에서 자국의 국익이 선명하게 확보될 때까지 이러한 지연효과를 느긋하게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

중국경제가 앞으로 순조롭게 발전하건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하건 우리는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뿐 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점에서 윈윈 전략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만 지적해본다.

첫째, 오늘날 중국경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영향도 매우 급격하며 충격적일 뿐 아니라 기민한 대응이 아니면 실효성을 잃게 되어 ‘기회조차 위기로’ 뒤바뀌는 어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메릴린치나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존 나이스 비트 등 외국 투자자나 전문가들은 한국을 부상하는 중국경제의 최대 수혜국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경탄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부화뇌동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에 대하여 잠재력 큰 내수 시장과 제3국 시장을 겨냥하여 부품과 소재, 저임금 활용을 위한 대중국 투자를 적극화하는 한편, 투자를 전략적으로 분업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 부상의 영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포괄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중국 변화의 영향으로 중국자체와 미국, 북한을 통한 충격은 물론 일본, 동남아, 러시아, EU 등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국제적인 무역, 투자 및 금융의 흐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고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아직 초기단계로 불안정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영향은 불확실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승하면서 한·중간의 사업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아직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스의 영향과 올 봄 긴축정책의 파장 등 중국의 경기변동 조짐에 우리 경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경제의 구조적 이해 없이 알레르기적 반응이 유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경제에 대한 좌충우돌식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 역학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은 미중관계이며, 북핵문제나 남북한 관계도 그 하부구조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외적인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내 정치의 안정이 대전제임은 물론이다.

다섯째,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지난 1990년대에는 ‘서해안시대’, 그리고 2000년대에는 ‘동북아중심시대’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갑작스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변동이 일시적일지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 점에 대해서 협력하여 대처하는 시스템을 예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연구보고 M73 / 2005. 12
2005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활동보고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전화 02-2263-7534(代) E-mail khip@khip.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